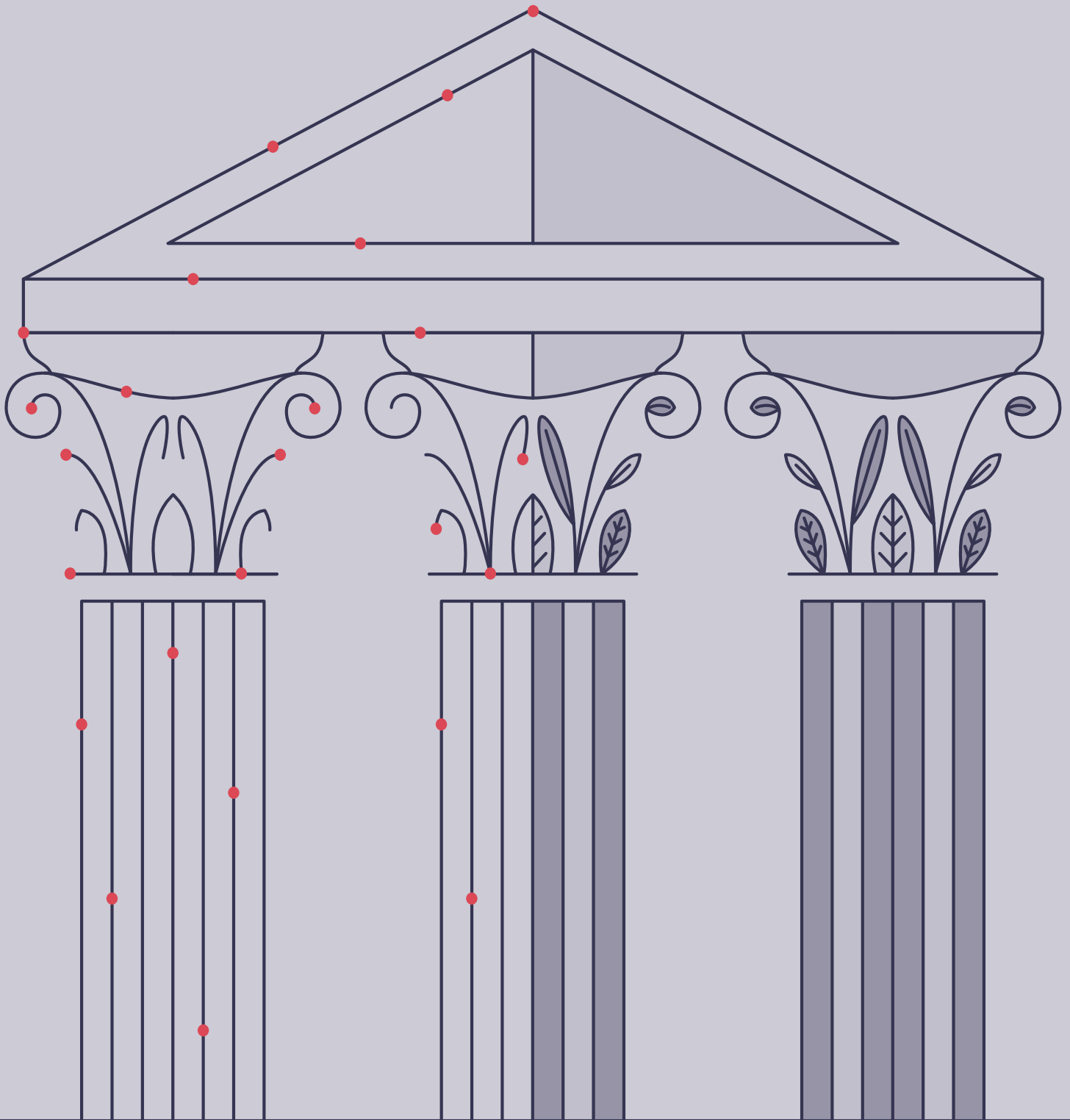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3 스냅샷(국문)

저자: Joana Setzer, Catherine Higham

번역: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CCCEP)는 철저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활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해당 센터는 University of Leeds와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UK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에서 해당 센터에 자금을 지원한다. www.cccep.ac.uk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는 2008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경제, 금융, 지리, 환경, 국제 개발, 정치 경제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성을 결합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정책 관련 연구,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세계적인 선도 연구 센터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Grantham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데, 동 재단은 Imperial College London의 Grantham Institute –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www.lse.ac.uk/grantham

저자 소개

Joana Setzer는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의 조교수 연구원이다.

Catherine Higham은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의 정책 연구원으로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에서 활동하고 있다.

감사의 말

본 보고서는 Maria Antonia Tigre 박사, Michael Gerrard 교수, Michael Burger의 노고와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s Network of Peer Reviewers의 노력 없이는 작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글로벌 기후 사례의 다양한 발전을 추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Tigre 박사와 Burger씨가 제공한 의견과 기여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저자들은 또한 Tiffanie Chan, Ian Higham 박사, Kim Bouwer 박사, Nigel Brook, Cynthia Williams 교수, Sophie Prinz, Zaneta Sedilekova, Jasper Teulings, Letty Thomas, 그리고 Yue Zhao 박사에게 본 보고서에 대해 주신 유익한 의견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독일 기후 소송의 많은 새로운 발전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 Isabela Keuschnigg, 보고서 교정 편집의 Georgina Kyriacou, 제작 지원의 Natalie Pearson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에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for the Environment (FILE), Grantham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또 제출된 작업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나 활동이 없음을 선언한다.

본 보고서는 저자들의 견해를 담은 것으로, 주관 기관이나 후원자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하지는 않는다. 모든 오류와 누락의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6월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와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 원 저자들, 2023

권한 요청 시 Grantham Research Institute로 연락해야 한다.

추천 인용법: Setzer J and Higham C (2023)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3 Snapshot.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원 저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 이외에, 국문 번역에 따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번역 참여: 변호사 하지현, 임두리, 김건영, 김현지, 이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의 저작물 인용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하지현 변호사, jihyeon.ha@fourclimate.org)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저작자 및 출처를 표기하여서만 가능하며, 이외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목차

개요	2
서문	8
제1부. 전반적인 동향 이해	11
소송의 관할지역 및 시기	11
원고와 피고: 기후소송의 주역	18
전략적 기후변화 소송 및 소송 전략	19
기후소송의 결과 및 영향	27
제2부: 소송 동향을 중심으로	32
정부에 대한 소송의 발전: 인권과 기후 법령의 역할	32
기업 책임 소송의 : 과거 및 미래의 책임, 손실 및 피해	35
기후 리스크 관리: 온난화하는 세계에서 바람직한 투자는?	37
기후위험 및 친환경 주장	39
고배출 활동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전략	42
미래 동향	44
결론	47
부록. 방법론 주석	48
참고 문헌	50

요약

주요 동향,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 Sabin Center의 기후 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2,341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그 중 190건은 지난 12개월 내에 제기되었다. 사건 수의 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다양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 기후변화 소송은 불가리아, 중국,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터키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 50% 이상의 기후 소송에서 기후 행동에 유리한 직접적인 사법 결과가 나타났다. 기후 소송은 법정 밖의 기후변화 결정에도 상당한 간접적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 국내 법적 보호(예: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국내 기후 법령은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소송 당사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특정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은 친(親)기후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반(反)기후적인 소송(예: 'ESG 백래쉬')이 증가하고 있다.
- 기업 행위자들에 대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 복잡한 법리논쟁이 사용된다. 미국의 도시들과 주들이 탄소메이저들에 제기한 약 20건의 소송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 친환경 주장과 약속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후 워싱'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하는 일부 사건들은 허위 정보에 대항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존하고 있다.
- 정부와 기업의 기후 정책 대응에 대한 도전은 미국 외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 투자 결정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맥락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배출 활동은 이제 초기 자금 조달부터 최종 프로젝트 승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애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도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가 운영하는 기후 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후 변화 소송의 주요 국제적 발전 동향을 검토한다.

동향과 관찰 사항 개요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둔화가 있을 수 있음

전반적으로 Sabin Center의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에 2,341건 이상의 사건이 기록되었다. 이 중 약 3분의 2(1,557건)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에 제기되었다. 이 중 190건은 지난 12개월 동안 제기되었다. 전체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종료 이후 미국에서 제기된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2021년에 사건 수가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장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새로운 지역에서 기후 변화 소송이 계속 확인됨

지난 12개월 동안 불가리아, 중국,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터키에서 새로운 사례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새로운 사건의 증가세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며, 독일은 많은 최근 사건 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대다수의 사건들이 북반구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남반구 개도국에서도 새로운 사건들(135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주장들이 공통적인 테마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건들은, 법원이 기업들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 고유의 기후 소송 형태가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법정 및 재판소에 대한 세 개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 미래 소송의 판도를 형성할 수 있다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Law of the Sea (ITLOS),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앞으로 권고적 의견 요청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구속력이 없지만 미래 기후 변화 법의 발전을 형성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비정부기구(NGO)와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기후 사건들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들(이하 '글로벌 소송'으로 지칭) 중 거의 90%에 가까운 소송들은 비정부기구(NGO), 개인 또는 양자가 협력하여 제기되었으며, 이는 이전 몇 년 동안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 제기된 글로벌 소송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송들은 소송의 70%를 차지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은 제기된 소송의 약 54%만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회사들에 대한 전략적 소송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산업의 기업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략적 소송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당사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특정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기후 소송들은 '전략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관련 의사결정을 둘러싼 더 넓은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기된다. 전략적 소송의 소송 당사자들은 종종 다른 곳에서 사용된 비슷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전략적 소송들에서 사용된 전략들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¹

-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미국 외 국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81건의 소송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건들은 정부 대응의 야심 부족이나 정책 및/또는 입법의 도입 실패를 초점으로 둘 수 있다.
-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 대기업들에 대해 제기된 17건의 사건들은 그들의 기후 계획이나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익을 제기한다.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는 '기후위험'에 대한 논쟁을 포함할 수도 있다(아래 참조).
- **'기후 고려사항 통합' 소송:**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 고려사항, 기준 또는 원칙을 통합하고자 하는 206건의 소송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송들은 종종 환경을 해치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중지시키고 기후 문제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더 주류화하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제기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많은 소송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개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 고배출 또는 환경을 해치는 프로젝트나 활동에 자금 흐름을 막기를 목표로 한 28건의 소송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 중 14건은 공공 기관이나 국영 금융 기관(예: 수출 신용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12건은 은행과 연금 기금을 포함한 민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 많은 소송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므로 다중으로 집계될 수 있다.

- **'적응 실패' 소송:** 14건의 소송은 정부 또는 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한 요구 사항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이익을 제기한다. 이는 소유물이나 운영을 물리적 위험에 적응시키지 못했거나 전환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오염자 부담'(보상) 소송:**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1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미래 기후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책임, 피고의 활동으로 인해 탄소 기후 흡수원이 손상된 경우 '배출량 상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 **'기후위성' 소송:** 57건의 소송은 정부나 기업의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대한 부정확한 내러티브 또는 기후 과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도전한다. 이 중 대다수(52건)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 **'개인 책임' 소송:** 8건의 소송은 공공 및 민간 의사결정자들이 기후 문제를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후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개인의 책임(형사 또는 민사)을 묻는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위성'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전략 중 하나는 기업의 소위 '기후위성'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는 기후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주장에 관한 것이다. 미국 외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보고서의 2부에서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 및 미국 외의 소송들의 증가와 시간에 따른 통계 변화를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81건의 기후 위성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27건은 2021년, 26건은 2022년에 제기되었다. 이는 2020년 9건, 2019년 6건에 비해 큰 증가이다.

모든 전략적 소송이 기후 행동을 촉진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소송은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반(反)기후적' 소송이라고 한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소송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좁은 기후 소송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소송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특정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 또는 개입 권한에 도전하는 새로운 소송이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반-ESG [환경/사회/거버넌스] 백래쉬' 소송이 가장 최근에 나타난 추세 중 하나이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소송들이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후 소송은 일반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려는 '친(親)규제'(즉, 기후 관련) 소송들과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반(反)규제'(즉,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을 찾고자 하는 소송들로, 전환 과정에서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강조한다.

기후 변화 소송은 기후 거버넌스에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 사건의 직접적인 사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간 임시 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549건의 소송 중 50% 이상이 기후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일부 소송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법 결과가 있더라도 판결이 구현되는 방식이 기후 완화나 적응을 증가시킬지 여부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기후 소송이 기후 거버넌스 및 그 너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간접적 영향에는 기후 소송이 금융 규제기관과 법률 사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증가시키는 방식, 기후 변화 소송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기업에 대한 소송이 그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 등), 그리고 실패한 소송조차도 기후 행동을 둘러싼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접근 방식을 변경하도록 격려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주요 동향: 최근 기후 소송의 발전

정부에 대한 소송: 인권의 역할과 기후 법령의 역할

지난 12개월 동안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즉 체계적인 기후 소송 또는 *Urgenda* 스타일 소송[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중요한 발전사항이 있었다.

국제 및 지역 법원은 프레임워크 소송에 관련된 법학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최근 발전사항 중 하나는 UN 인권위원회가 *Daniel Billy and others v Australia* 사건에서,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곧 야심찬 완화 목표의 채택을 통해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추가로 요구하는 세 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5월에 심리된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사건과 *Careme v. France* 사건, 그리고 9월에 심리 예정인 *Duarte Agostinho et al. v. Portugal and 32 Others* 사건).

국내 법적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와 같은 국내 법적 보호는 여러 국가에서 프레임워크 소송이 진전되는 기반의 일부가 되었다(예: *Held v. Montana* 사건과 *Navahine F. v.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사건). 동시에, 기후 변화 프레임워크 법률은 계속해서 프레임워크 및 부문 수준에서 새로운 소송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사건 참조).

정부에 대한 인권 주장은 프레임워크 소송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Cancel Coal' 소송의 경우, 처음 프레임워크 소송에서 개발된 주장과 증거와 유사한 것이 정부조달 과정을 도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기업에 대한 소송: 과거와 미래의 책임, 손실 및 피해

최근 몇 년 동안 제품으로 인한 기후 변화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소위 '탄소메이저'라 불리는 대형 석유, 석탄, 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6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29건의 미국 소송은 도시와 주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 소송에서 평행 추세가 통합되었다

기업 책임 소송은 추구하는 구제 유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는 역사적 책임에 근거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다. 또 다른 일부는 기업의 활동을 파리 협정 및 인권 의무와 일치시키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눈에 띄는 발전은 이 두 유형의 소송이 합쳐지고 있다는 것이다(예: *Asmania et al. v. Holcim* 및 *Greenpeace Italy et al. v. ENI S.p.A* 사건).

현재와 과거의 손실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다

*Asmania*와 같은 소송은 기후 관련 사건으로 인해 이미 입은 피해를 강조한다. 손실 및 피해 주장은 오염자 부담 소송에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예를 들어, *Municipalities of Puerto Rico v. Exxon Mobil Corp* 소송은 허리케인의 영향과 가 겪은 누적된 손실을 연결시킨다.

허위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고배출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의 효과에 관해 유포한 허위 정보와 관련된 기후 소송은 계속해서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Municipalities of Puerto Rico v. Exxon Mobil Corp 사건은 화석 연료 회사들이 지속적인 기만 행위를 하며, 이는 조직범죄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과거에 담배 산업에 대한 소송에서 사용된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 법령을 기반한 주장을 인용한다.

기업 책임 소송은 '탄소메이저'를 넘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독일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내연 기관 차량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여러 소송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기업실사' 의무를 주장하며 금융 기관을 둘러싼 새로운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후 리스크 관리: 온난화하는 세계에서 바람직한 투자는?

최근의 소송 사례들은 저탄소 전환 맥락에서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소송들은 기업 및 금융 법률 하에서 기업, 주주, 투자자 및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투자 결정의 예상되는 미래 영향에 대한 초점

초기 주주가 제기한 소송은 부실 경영 및 기후위기 공개 실패로 인해 회사가 이미 입은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의 소송들, 예를 들어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 사건은 예측된 미래의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면 장기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기 소송은 영국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자들의 역할과 기후변화의 현실에 적응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소송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기후 변화의 복잡성에 대한 의사결정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응이 중요하다. *Butler-Sloss v. Charities Commission*과 같은 사건에서 투자를 환경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신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소송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위험과 친환경 주장

기후위험 관련 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법률과 기준, 그리고 집행 기관의 조치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의 기후 약속에 대한 도전, 제품 특성에 대한 주장, 기후 행동에 대한 과장된 투자 또는 지원, 기후 위험 미공개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정보를 다룬다. 예를 들어, Glencore사가 넷제로 약속에도 불구하고 석탄 생산을 확대한 것에 대한 제소, 제품이 '기후 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도전, 폭스바겐에 대한 기후 서약과 기업 로비 활동 간의 모순에 대한 소송, 그리고 은행의 기후 위험 미공개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 또한 호주에서의 '국가지원 기후위험'에 대한 제소 EU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업데이트된 최신 OECD Guidelines, EU Directive on Green Claims 및 규제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같은 법률과 표준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고 기후위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고배출 활동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전략

주요 고배출 분야는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며, 프로젝트 개발 사건(예: *Sierra Club Canada Foundation et al. v. 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t al.* 사건)부터 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조달에 관한 사건(예: *Notre Affaire à Tous v. BNP Paribas* 사건)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유사한 추세는 산림 파괴를 다루는 소송에서도

관찰되며, 여기서는 산림 파괴에 기여하는 농업 회사들의 금융 및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제기된다(예: 브라질 및 프랑스 NGO 단체들이 BNP Paribas사에 제기한 **두 번째** 소송과 브라질의 대형 육류 회사 JBS사에 대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사건).

미래 동향

향후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 **생물다양성-기후 연계(nexus)²에 초점을 맞춘 소송**, 특히 숲을 복원하고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욱 야심찬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소송
- **'향후 정부와 기업이 바다를 보호 의무를 다루는 소송**, 향후 정부와 기업이 바다를 추가적인 기후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 산성화 및 해양 기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탐구할 의무를 다루는 소송
- **기후 변화가 중심 이슈는 아닐지라도 기상 이변 사건에 비롯된 소송**, 기후 변화가 중심 이슈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기후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 사건에서 비롯된 소송
- 과학자들에 의해 완화의 핵심 목표로 식별되는 메탄과 블랙 카본과 같은 **수명이 짧은 기후 오염물질에 관한 소송**
- 화석 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분쟁에 관련한 **국가 간의 국제 소송**

해수면 바로 위에 위치하여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인도네시아의 파리(Pari) 섬. (36페이지의 Asmania v. Holcim 사건 참조)
사진 출처: zvg

2 역주: 기후변화 관련해 통상 '넥서스(nexus)'라는 표현은 여러 대상이 복합적으로 상호연계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원문 그대로 사용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연계'로 번역하였다.

서론

본 보고서는 Grantham Research Institute가 발간하는 기후 변화 소송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연례 보고서이다. 각 보고서는 기후 변화 소송 분야의 최신 연구와 발전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동향을 설명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제기된 소송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있었던 소송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전 연도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소송 수, 매트릭스 및 분류에 대한 업데이트와 최근 소송에 대한 주제별 검토를 포함한다.

기후 변화 소송 정의

본 시리즈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법과 법원이 어떻게 다양하고 종종 일관성이 없는 기후 변화 관련 의제를 진전시키고 도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이 분야에 대한 간결하고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 변화 소송에 상당히 좁은 정의를 적용한다. 기후 변화 과학, 정책 또는 법에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는 사법 및 준사법 기관(중재 재판소, 국가 인권 기관, 소비자 감시기관, OECD 국가별 연락사무소 등) 앞으로 제기된 소송을 기후 소송으로 간주한다. 이 접근법은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at Columbia Law School이 기후 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사건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본 보고서의 기본적인 데이터 출처이다.

해당 기후 변화 소송의 정의가 우리의 목적에 유용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후 변화 과학이나 기후 변화 법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국가의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소송들이 있을 것이다(Peel과 Osofsky, 2020; Bouwer, 2018; Hilson, 2010). 특히 여기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 사건의 좁은 정의는 기후 행동에 대한 중요한 공동 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생물다양성이나 대기 질에 대한 법적 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춘 다른 형태의 '환경 관련' 소송을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가 보다 지엽적인 문제인 소송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다. 큰 이유는 더 많은 사건수를 처리할 여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소송들이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 소송의 경우 주장의 '지엽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배제하는 것은 기후 소송이 북반구 선진국에 편향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Peel과 Lin, 2019).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적어도 80건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 진술문을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법정 문서에 '기후 변화'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식별했다(Sulistiawati, 2023). 이 중 많은 소송은 산불과 불법 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며, 그러한 활동의 장기적 영향 맥락에서 '피상적인'(ibid.) 기후 변화 언급을 포함한다. '지엽적' 소송은 기후 법학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집계될 때 전 세계적인 기후 행동에 중요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보고서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출처

본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 출처는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와 같은 기관 파트너의 지원을 받는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가 관리하는 Global Climate Change Litigation 데이터베이스이다. 또 다른 US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는 Arnold & Porter 로펌과 협력하여 Sabin Center가 운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주로 글로벌(즉, 미국 외 지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교훈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국 내의 동향과 이외 지역의 동향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데이터를 참조하여 보완한다.

상자 A.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사건의 이해와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등장

기후 소송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소송(Setzer와 Higham, 2022)에 집중되며, 이는 때때로 '친규제' 소송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모든 기후 소송이 그 목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 소송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기타 '긍정적인' 기후 결과를 이끌어낼 규제나 정책의 도입에 도전하기 위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송은 과거에 '반규제'(Peel과 Osofsky, 2015), '방어적'(Ghaleigh, 2010) 또는 단순히 '반대'(Hilson, 2010) 소송이라고 지칭되었다. 대부분은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데 재정적 또는 이념적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당사자에 의해 제기된다.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유형의 소송을 설명하기 위해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climate aligned)' 및 '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non-climate-align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후목표와의 일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소송당사자 특정 소송을 제기하는 동기가 전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후 행동 의제를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키고자하는 욕구를 넘어서는 것을 반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 번째 독특한 범주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말한다. 해당 사건들은 기후 행동의 부족이 아니라 기후 행동이 취해지는 방식에 도전하는 소송이다(자세한 내용은 18페이지 참조). 2022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소송을 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의 하위 범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분류는 제기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방식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목적은 기후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종종, 청구인의 목적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와 그 조치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권리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검토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공존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강조한다(Savaresi et al., 근간; Tigre et al., 2023b).

데이터 범위 및 한계

2021년 이후로 많은 지역의 포섭 범위가 개선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의 학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Peer Review Network of Climate Litigation를 주관한 Sabin Center 덕분이다. 이들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의 소송을 추적하고 기후 소송에 대한 정보와 지식 공유 및 대화에 참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국가의 모든 법원의 모든 소송을 포함할 가능성은 낮다. US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는 미국 내 상업적 소송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Global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포괄적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들은 광범위한 지역과 국가 기관, 계층 행위자 및 분쟁 유형을 포괄하는 소송 사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종종 새로운 소송 시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영감을 주는 동향과 혁신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내외의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수치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만, 미국 사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내 사건과 미국 외의 사건을 별도로 다룬다.

상자 B. 기후 법률에 대한 데이터 제공 개선

이전 연도의 동 시리즈에서는 Grantham Research와 Sabin Center가 파트너십을 맺고 유지하고 있는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CCLW)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했다. CCLW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기후 변화 법률 및 정책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글로벌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2023년 5월 이후 기후 기술 스타트업인 Climate Policy Radar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사용자가 기계 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구를 이용하여 법률 및 정책의 전문을 검색하고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업그레이드 이전에 CCLW 데이터베이스는 Global Climate Change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소송 데이터도 제공했다.

임시 조치로, 소송 및 입법 데이터는 Grantham Research, Sabin Center 및 Climate Policy Radar가 데이터 사용자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단일 통합 글로벌 자원을 개발하는 동안 별도로 제공될 것이다.

데이터셋 바로가기: climate-laws.org / climatecasechart.com.

보고서의 구조

보고서 제1부는 전반적인 글로벌 기후 소송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전략적 기후 소송의 증가된 사용과 활용된 일부 전략들을 검토하고, 소송의 '직접적인' 결과를 검토하며, 소송의 더 넓은 영향 및 비용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제2부는 제1부에서 다룬 일부 전략들과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 후, 향후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춘 예상되는 미래 소송 동향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결론을 통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미래 동향을 전망한다.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제1부. 전반적인 동향 이해

본 항목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기된 소송의 건수, 시기, 관할, 소송당사자 및 주요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을 제공한다. 전략적 기후 소송의 증가 현황과 소송당사자들이 사용한 일부 전략 및 소송의 '직접적인' 결과를 살펴보고 기후소송의 확대된 영향력과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소송의 관할 및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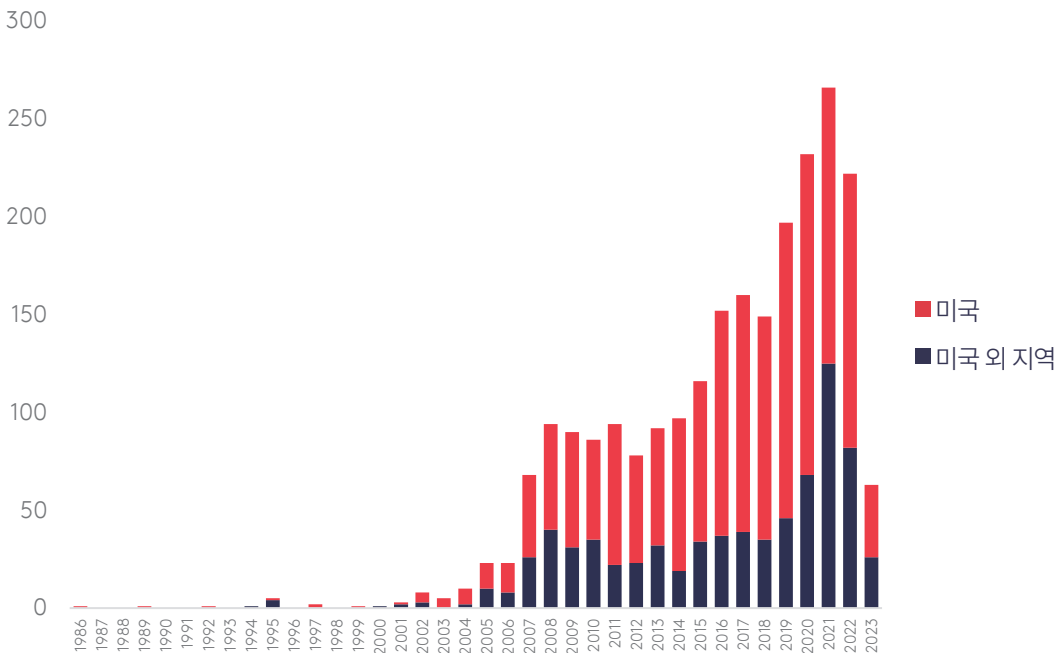
시간에 따른 통계

지금까지 최소 2,341건의 소송이 Sabin Center의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는데,³ 이 중 190건의 소송이 지난 12개월 동안(즉,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제기되었다. 전체 기후소송의 약 3분의 2(1,157건)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에 제기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소송에 인용된 법적논리가 다양해지고 소송이 제기된 지역이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2015년은 기후소송의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해였다고 말 할 수 있다(Setzer and Higham, 2022).

새로운 기후 소송 성장률의 둔화 가능성

전체 기후소송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는 그 증가추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림 11 참조). 2021년에는 총 266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22년에는 222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11. 시간 경과에 따른 기후변화 소송 총 건수, 미국 및 미국 외 지역 (1986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참고: 2023년 데이터는 본 보고서 작성 당시 시점에서도 수집 중이었으며, 소송 제기 후 사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식별 및 처리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2023년 데이터는 일부만 수집되었음.

출처: 저자,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함

3 2023년 5월 31일 현재 미국 소송건에 대한 최신 데이터(2023년 5월 23일 업데이트)에 포함된 모든 사건과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포함되기 위해 처리 중인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전반적인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의 건수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ilverman-Roati, 2021 참조). 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매년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그 수가 급증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 소송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의 설명은 NGO 커뮤니티 내부의 가용자원이 증가되어 그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아래 18페이지의 청구인 및 피고에 대한 논의도 참조). 물론, 많은 기후 소송들, 특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만약 이러한 소송이 성공을 거둔다면, 회사를 상대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자들이 초기에 보인 관심을 감안할 때, 그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Setzer and Higham, 2021; Kaminski, 2023; Hodgson, 20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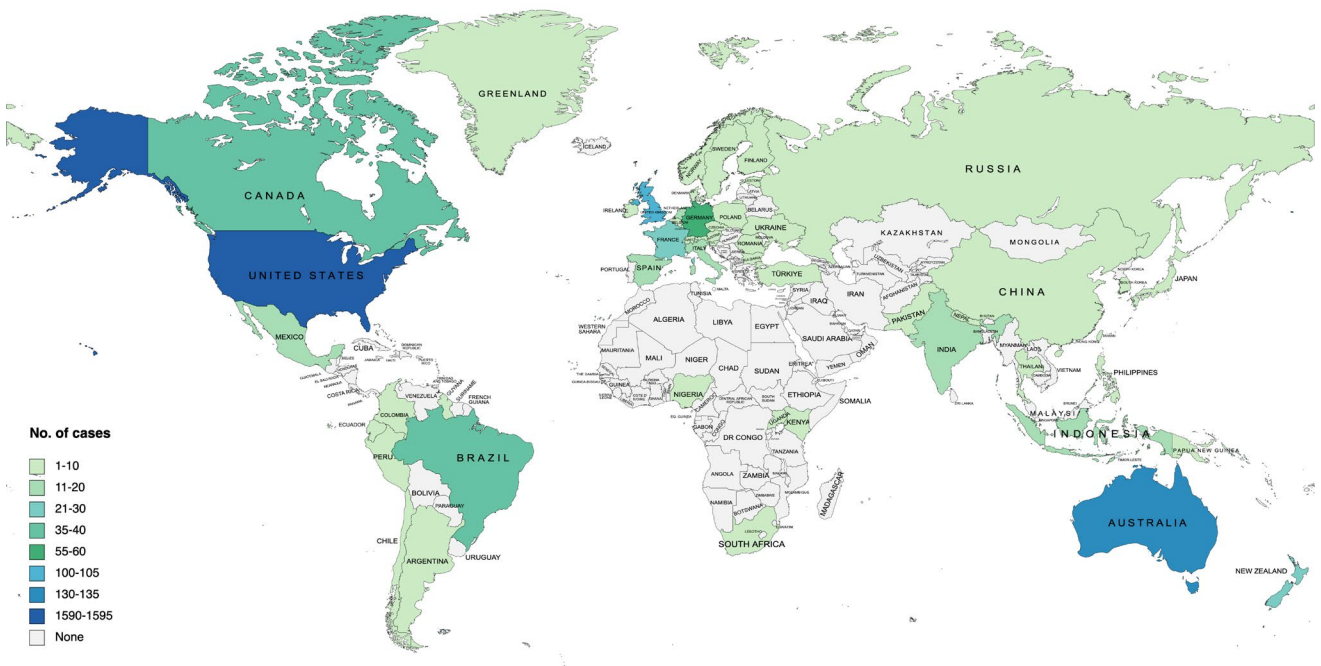
국가별 소송

전세계적으로 최소 51개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그림 1.2 참조). 국제 또는 지역 기구, 법원 또는 재판소에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7개의 새로운 관할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2016년에 중국에서, 2021년에 불가리아와 터키에서, 2022년에 핀란드, 러시아, 태국에서, 2023년에 루마니아에서 각 기후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기후소송이 가장 많이 기록된 국가는 여전히 미국으로, 총 1,590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130건이 확인된 호주와 102건이 확인된 영국이 뒤를 잇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에는 6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독일(59건), 브라질(40건), 캐나다(35건)에서도 비교적 많은 수의 소송이 접수되었다.

그림 1.2. 관할별 전 세계 기후 소송 건수(2023년 5월 31일 기준)



참고: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누적 수치. 이 자료상의 수치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 제기된 사건만 포함됨. 유럽사법재판소를 포함한 국제 또는 지역 기구에 제기된 118건의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음.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저자들. Mapchart.net을 이용하여 작성됨.

국가별 상황에 따른 기후 소송의 특징과 수

소송의 건수는 관할구역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독일 소송의 수는 마지막 보고서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27건에서 59건으로 증가). 이는 부분적으로 독일 기후소송의 새로운 시대를 이끈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노이바우어 사건(*Neubauer et al. v. Germany*)의 성공적인 결과 이후 독일에서 기후 소송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EUFJE 독일 국가 보고서, 2022).

이후의 소송들은 노이바우어 판결의 대상이었던 기후보호법(Climate Protection Act)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산업별 수준에서의 도입(예: *BUND v. Germany*; *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LULUCF)*), 주정부 차원의 기후 행동(예: *Luca Salis et al. v. State of Sachsen-Anhalt*),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전환 계획에 도전하는 소송들(예: *Kaiser et al. v. Volkswagen AG*)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 보호 기관과 법원에 제기된 '기후 위상' 관련 신청사건도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59건 중 21건,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참조).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 소송이 급증한 현상은 소송의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상자 11 참조).

상자 11. 기후 변화 관련 법률이 기후 변화 소송을 형성하는 방식 -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모든 기후 변화 소송이 기후 변화 관련 법률, 즉 국가의 기후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특별히 도입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주목받는 기후 변화 소송의 대부분은 헌법, 인권법, 소비자보호법, 또는 불법행위법과 같은 기존의 법적 의무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미 확립된 법적 의무를 상황에 맞게 해석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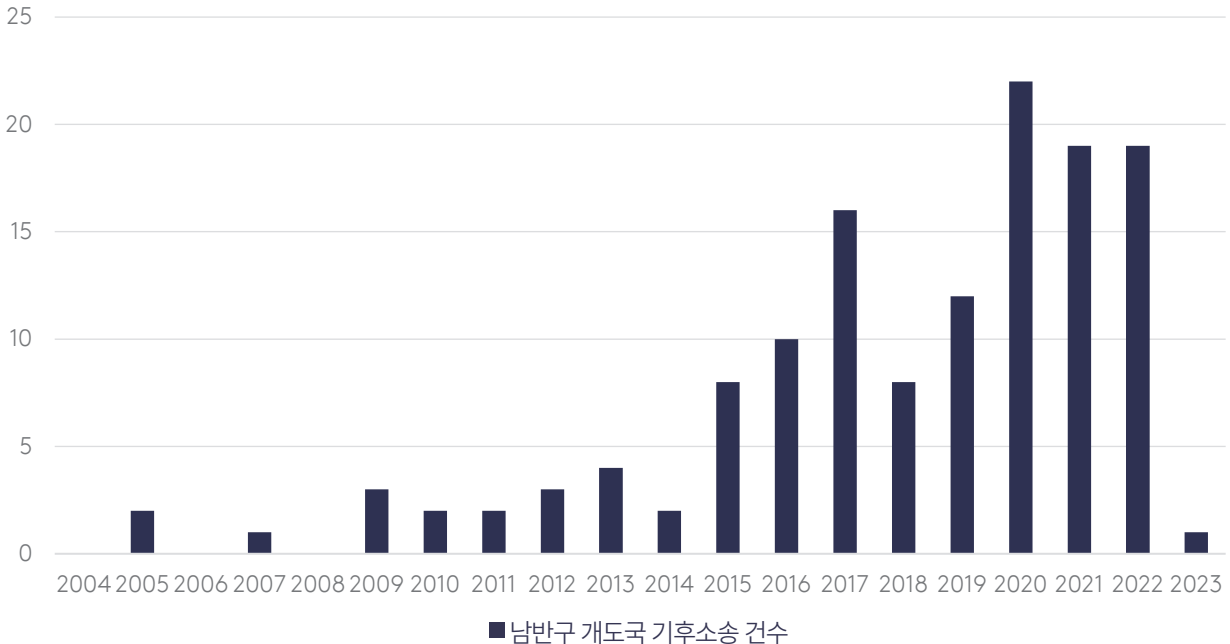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후변화기본법과 같이 기후 변화에 특화된 법률의 존재는 특정 국가의 기후소송 형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약 60개 국가가 장기적인 기후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할 기관과 내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내 기후변화 기본법을 채택했다(Higham et al., 2021; Averchenkova et al., 2017; Iacobuta et al., 2018). 이 중 거의 절반은 2060년 또는 그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종종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약속된 내용을 반영한다. 그러나 국내 법률은 NDC보다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며, 범위에서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내 법률을 고안하는데 있어 국가별 차이는 기후 변화 소송 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채택하는 법적인 논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제2부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이러한 법률은 야심찬 기후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거나 개정되고, 구체적인 기후 정책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률은 *노이바우어 사건* 이후 새로운 기후 목표가 도입된 독일의 사례와 같이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과거 기후 변화 소송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존재는 또한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이 현상에 대한 유럽 맥락에서의 추가 논의는 Higham et al., 2023 참조).

북반구 선진국 기후소송

앞서 언급된 정의에 부합하는 기후소송은 현재까지 대부분 북반구 선진국 지역에서 기록되었다.⁴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남반구 개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 기록 수집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남반구 개도국 기후소송은 135건에 달하며, 이 중 50건 이상이 2020년 이후 제기되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남반구 개도국에서의 기후소송 건수 추이(2004년부터 2023년 5월 31일)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 기반 자료

남반구 개도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의 여러 특징은 이전에도 분석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창의적인 방식의 인권 관련 주장으로(Garavito, 2020), 특히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에 근거한 주장과 환경 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환경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한 소송이 눈에 띈다(Lin and Peel, 2019; Setzer and Benjamin, 2020a, 2020b; Ohdedar, 2022). 이와 같은 주장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주로 인용되어 왔으나(Auz, 2022; de Vilchez and Savaresi, 2023; Tigre et al., 2023b), 아프리카(Bouwer, 2022; Bouwer et al., 2024년 개시; Loser, 근간)나 비중은 적지만 아시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는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중국 법원에서도 자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후소송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부가정보 1.2 참조).

4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역주: 해당 문단 이외의 '글로벌 사우스'를 '남반구 개도국'으로 번역)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역주: 해당 문단 이외의 '글로벌 노스'를 '북반구 선진국'으로 번역)의 구분은 경제적 불평등에 근거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동질적인 국가 그룹이 아니며 각 국가의 법률 발전단계와 역량은 모두 다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국가를 'G77 + 중국' 국가 목록에 따라 구분한다.

상자 1.2. 중국에서의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에 처음으로 기록된 2건의 중국 내 기후소송은 2016년 중국 NGO인 '자연의 벗(Friends of Nature)'이 간쑤성과 닝샤성에 위치한 2개의 국영 전력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제기한 소송이다. '자연의 벗'은 두 기업이 해당 지역의 가용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모두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화력발전에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쑤성에서 제기된 소송은 2023년 4월 간쑤성 국영 전력회사가 신규 전력망 건설에 9억 1,200만 위안을 투자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의 송전 용량을 높ی겠다고 약속하며 마무리되었다. 닝샤성 국영 전력회사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록 해당 소송이 국영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만일 더욱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정치적인 영역에 개입하여 명백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Yan, 2020: 374)". 그러나 민간 영역 내에서 기후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데, 중국에서 제기된 세 번째 기후소송(*Beijing Fengfujiuxin Marketing and Technology Co. Ltd. v. Zhongyan Zhichuang Blockchain Co. Ltd.*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에는 아직 기후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 없으나, 법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부의 기후정책을 활용해 기후 행동 확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적 의무를 해석할 수 있다(Zhu, 2022). 중국 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쟁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전국 법원은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반구 개도국 주요 동향

-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근 남아공 법원은 *Sustaining the Wild Coast NPC and Others v. Minister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and Others*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남아공 고등법원은 남아공 남부 해안을 따라 지진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허가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타지 않는" 화석연료 매장량을 언급했으며, 석유 및 가스 탐사가 남아공의 국제 기후목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아공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후소송의 좁은 정의를 넘어서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 가지 관련 사례로 "*Trustees for the Time Being of the Groundwork Trust and Vukani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 Movement in Action v. Minister of Environmental Affairs* 사건(또는 'Deadly Air'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이 남아공 정부에 제기한 소송으로, Mpumalanga 지역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 12곳, 석탄액화공장 1곳, 정유소 및 다수의 오염 유발 산업시설과 광산이 위치해 있다. 남아공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은 2년 이상 지연되어 여전히 공포되지 않고 있었으므로(Loser, 근간), 이 사건은 환경오염 및 석탄 관련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이 소송에는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인 David Boyd 교수가 법정조언자로 참여했다. 2022년 3월 Pretoria 고등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남아공 정부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측면에서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선언하였다.

- **인도네시아:**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정부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Indonesian Youths and others v. Indonesia* 사건). 이 사건은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가 약 7년에 걸쳐 수행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조사는 세계 최대 화석 연료 회사 47곳이 필리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2022년 5월에 결론이 발표되었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이 그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하고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Setzer and Higham, 2022 참조). 비록 해당 인도네시아 사건은 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이전에 필리핀에서 수행된 조사는 추후 인도네시아 소송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 브라질:** 2022년 7월, 브라질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은 파리 기후협정의 중요성을 전례 없이 인정했다. 이는 *PSB et al. v. Brazil (on Climate Fund)* (ADPF 708) 사건의 판결로, 정부에 의해 기후기금(Climae Fund)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고발하는 소송이었다. 기후기금은 브라질 정부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후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소송은 기후소송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Tigre and Setzer, 미출).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전 세계 기후소송 사례 중 처음으로 파리 협정을 인권 조약으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이 기후변화와 인권을 공동의 행동 프레임으로 통합하여 책임 강화, 국제 협력 및 기후 정의를 촉진하는데 기여를 했다(Knox, 2020).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 기후 금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권한 분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절차적으로도 해당 판결은 사법 분야에서 몇 가지 혁신을 일으켰는데, 정당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거나, 법관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세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 생겼다는 사실이다. 해당 소송 당시 법원은 과학자, 환경운동가, 원주민, 농업 및 금융 부문 대표자, 경제학자, 연구자, 국회의원과 연방 및 주정부 대표를 비롯한 66명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언하도록 했다.



(사진 설명) 기후기금 관련 PSB et al. v. Brazil 사건을 심리 중인 브라질 연방대법원 본회의 모습. 사진: Carlos Moura/SFT.

- 브라질에서의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소송이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2년 6월 브라질의 한 NGO는 브라질의 국가개발은행 및 산하의 투자사에 소송을 제기했다(*Conectas Direitos Humanos v. BNDES and BNDESPar*). 이 NGO는 BNDES사가 지분을 소유한 여러 회사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분을 관리하는 BNDESPar사가 자사의 투자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파리 협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반한 브라질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사례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남반구 개도국 지역주민들이 마주하게 된 여러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Marmara 호수에서 활동하는 어부들로 구성된 한 협동조합은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진 습지 지역인 Marmara 호수를 보전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S.S. Gölarmara ve Çevresi Su Ürünleri Kooperatifi v. Republic of Türkiy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nisa Directorate of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어부들은 정부가 여러 인프라 사업 진행 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Marmara 호수의 환경이 훼손 및 건조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은 정부가 호수 보호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어업 면허 비용의 면제를 요구했다.

전 세계 및 지역 기후소송

기후소송 대다수가 국내 법원이나 EU 법원에 제기되지만, 최소 50건의 소송은 11개 국제 또는 지역 법원 및 재판소, 유엔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에 제기되었다.⁵ 이 중 20건은 인권 기구에 제기되었으며, 12건은 국제투자협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기관에 제기되었다(*Fermeglia et al.*, 근간).⁶ 나머지 사례 중 10건은 2009년~2018년 사이 제기된 교토의정서 불이행 절차에 따른 제소사건이었다.

지난 12개월간 4건의 새로운 소송이 국제 기구에 제기되었다. 이 중 3건은 국제법원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며, 1건은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BP사의 이사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국제법원의 권고적 의견 요청 3건

권고적 의견 요청 3건은 각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미주인권재판소(IACtHR),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경우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SIS)가 요청한 사례로, 해양 환경 오염을 예방, 완화 및 통제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하는데 있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가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는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기후변화 전반과 관련한 특정 이슈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요청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요청은 해양 환경 보호 의무에 관한 UNCLOS 판례에 기초하며, 기후와 해양의 상관관계에 관한 법적 논리를 발전시켰다(Roland Holst, 2022).

5 현재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동아프리카인권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준수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실, 다수의 유엔 특별절차, 유엔 사무총장, 상설중재재판소,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국제투자분쟁기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유럽의 일반 법원에도 기후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EU의 특수한 초국가적 지위를 고려하여 EU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유사한 종류로 간주하였다.

6 이는 기후 관련 ISDS 소송 사례의 극히 일부이며, 다른 출처 등에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를 향한 권고적 의견요청은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공동 요청한 사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무의 범위를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기후 적응과 환경운동가 보호 관련 질문 역시 포함되어 있다. 미주인권재판소가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 이전의 권고적 의견(OC-23/17)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Viveros and Auz, 2023).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가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을 받은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요청은 Vanuatu를 필두로 소규모 섬 국가 18개국이 제기한 것으로, 제출에만 3년이 걸렸다. 이러한 종류의 요청은 규정에 따라 공적인 국제기구만 제출할 수 있어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29일, 유엔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기후피해로부터 기후 생태계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장 취약한 지역을 비롯해 전 지구적인 기후피해를 초래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국제형사재판소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론 각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위험도 있으나, 각 요청들 간의 차이가 오히려 각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 간의 상호보완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Auz and Viveros-Uehara, 2023), 이러한 의견들은 향후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법원의 권고적 의견은 거의 대부분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은 이러한 권고적 의견이 상당한 법적 및 도덕적 무게가 있으며 법적 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Roland Holst, 2022).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온실가스 배출로 다른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라 유해한 활동을 중단하거나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Kysar, 2022). 이와 같은 사례에서 결정된 국가의 법적 의무와 관련된 논리의 '구체화'는 추후 전 세계에서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avaresi et al., 2021).

원고와 피고 : 기후소송의 주역

기후소송을 이어가는 NGO와 개인들

2022년 6월부터 12개월간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이하 "글로벌 소송")의 약 90%는 비정부기구(NGO)나 개인, 또는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는 본 보고서의 전년도 조사내용과도 일치한다. 미국 내의 경우 이 비율이 70% 가량으로 조금 낮은 편이며, 지난해에 제기된 미국 소송 중 기업과 무역 협회가 제기한 소송의 비율(13%)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최근 시작된 추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수치를 1986년 이후 제기된 전체 소송 건수와 비교하면, NGO 및 개인이 제기한 소송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글로벌 소송 중 60% 달하는 사건(751건 중 440건)이 NGO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었으며, Sabin Cente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중 약 70%는 NGO가 제기하였다(Silverman-Roati, 2021).⁷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NGO와 개인의 기후소송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전략적' 또는 '반(semi)전략적' 기후소송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아래에서 설명), 이는 의사결정에서 자주 배제되거나 기후 거버넌스 결정에 불만족하는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도구로 소송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atros and Khan, 2022).

7 주주 자격으로서 NGO가 제기한 소송 역시 'NGO 소송'으로 분류하였다(예: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

피고를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미국 외 지역의 기후소송

기후소송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후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2개월 동안 정부를 상대로 한 글로벌 소송의 비율이 감소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제기된 61건의 소송 중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약 52%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기관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 4건은 정부의 의무 범위에 관한 것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들을 특정 피고가 없는 사례로 분류했다.⁸ 반면, 소송의 약 40% 이상이 기업이나 무역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여기에는 여러 유럽국이 FIF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5건이 포함되는데, FIFA가 월드컵 당시의 그린워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⁹

전략적 기후변화 소송 및 소송 전략

기후변화 소송이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 및 사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Bouwer and Setzer, 2020). 전략적 기후소송이 기후변화 적응 및/또는 완화 정책, 특정 입법 또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반기후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친규제적 영향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Golnarghi et al., 2021). 기후변화 운동은 이미 과거의 전략적 인권 소송에서 얻은 교훈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Silbert, 2022).

Batros와 Khan(2022)은 전략적 기후소송이 전략적 인권 소송에서 무엇을 참고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전반적인 변화(즉,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련의 개입)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송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판결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전략의 위험요소를 평가할 필요성 등이다.

전략적 소송의 정의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지도 않다(여기서 활용한 방법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이 연구를 위해, 특정 소송을 전략적 소송으로 분류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 다음 사항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반(semi)전략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반전략적 및 전략적 소송을 하나의 범주로 구분했는데, 이들 사이에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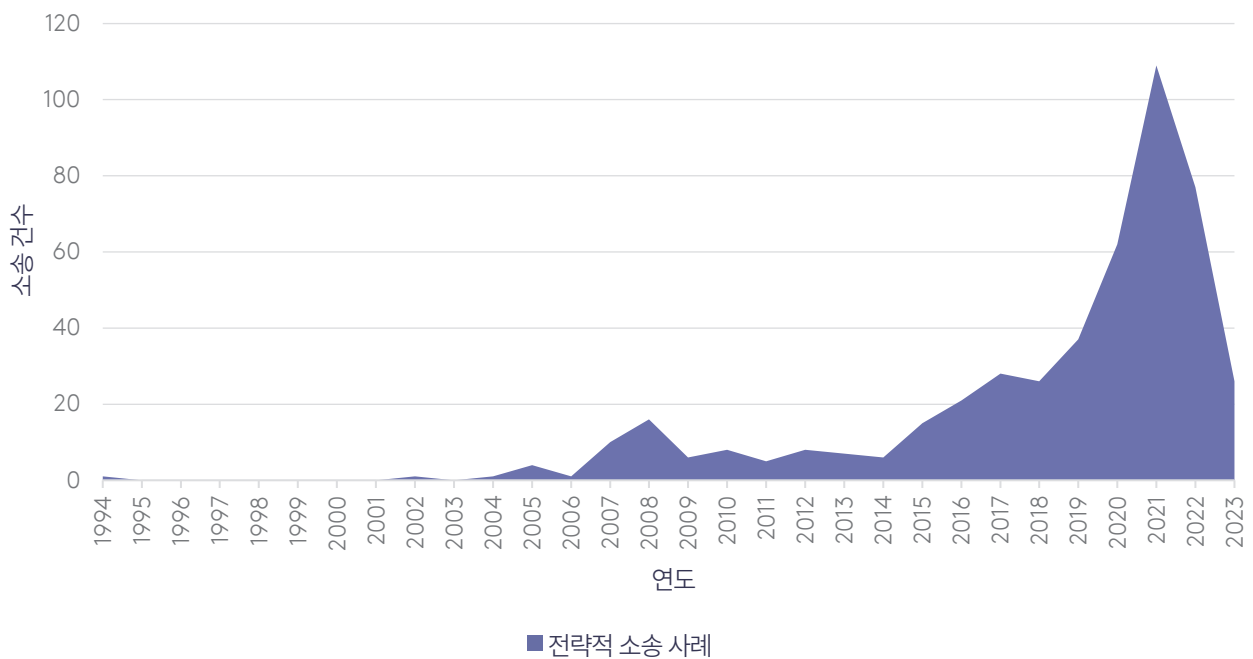
- **원고의 정체성.** 전략적 소송에서는 신중하게 기획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원고가 선정된다(Peel and Markey-Towler, 2021). 전략적 기후소송의 대부분은 NGO, 개인 활동가,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제기한다. Okoth와 Odaga (2021)는 'litigation plus'라는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데, 이는 원고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NGO와 변호사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주민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법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중심에 두고 공동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movement lawye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Cummings, 2017). 대부분의 경우, 이미 다른 전략적 목적의 법적 절차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법률팀이 원고를 대표한다(Peel and Markey-Towler, 2022).
- **피고의 정체성.** 전략적 기후소송은 기후 문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행위자(예: 입법이 가능한 정부 및 최대 탄소배출 기관)와, 이들의 기후 관련 행위나 그 위험성과 관련해 대응을 오도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전략적 소송은 '명백한' 피의자 외에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치사슬이 지속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탄소 다배출 기업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승인하는 정부기관이나 탄소 다배출 기업의 핵심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Solana et al. (2023)은 이를 'systemic lawyering'이라 설명한다.

8 이러한 요청을 엄밀히 말해 '소송'이라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관련법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소송의 범위에 포함했다.

9 법인을 대신해 개별 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본 보고서의 데이터셋에서 법인과 개인이 모두 관련된 사례로 기록하였다.

- **소송의 목적.** 전략적 소송은 '개별 사건의 즉각적인 성취나 실패와 관련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ouwer and Setzer, 2020). 전략적 소송은 특정 원고의 상황을 넘어 전반적인 구제책을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규제 발전을 촉진한다(Peel and Markey-Towler, 2021). 이러한 소송의 목표는 남반구 개도국과 부유국 또는 선진국을 비교할 때 달라질 수 있으며(Setzer and Benjamin, 2020a), 한 국가 내에서도 국가지도자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전략이 크게 변할 수 있다(예: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후소송, Gerrard and McTiernan, 2018 참조).
- **소송이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 되는 경우.** 전략적 소송은 하나 또는 여러 조직이 수행하는 옹호(advocacy) 전략의 일부이다(Eilstrup-Sangiovanni, 2019). 이렇게 법적 개입이 더 큰 옹호 전략의 일환일 경우, 해당 기후소송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조직(또는 여러 조직)의 입장을 보완하거나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NGO가 입법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로비 또는 압박을 하거나, 특정 기업에 서한을 보내거나, 거리에서 시위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후소송 운동은 새롭게 대두되는 초국가적 기후소송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이 되기도 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소송당사자에게 지식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Iyengar, 2023). 언론 보도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역시 이러한 더 큰 퍼즐의 다른 한 조각이 되기도 한다.

그림 1.4.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전략적 소송 건수의 추이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 기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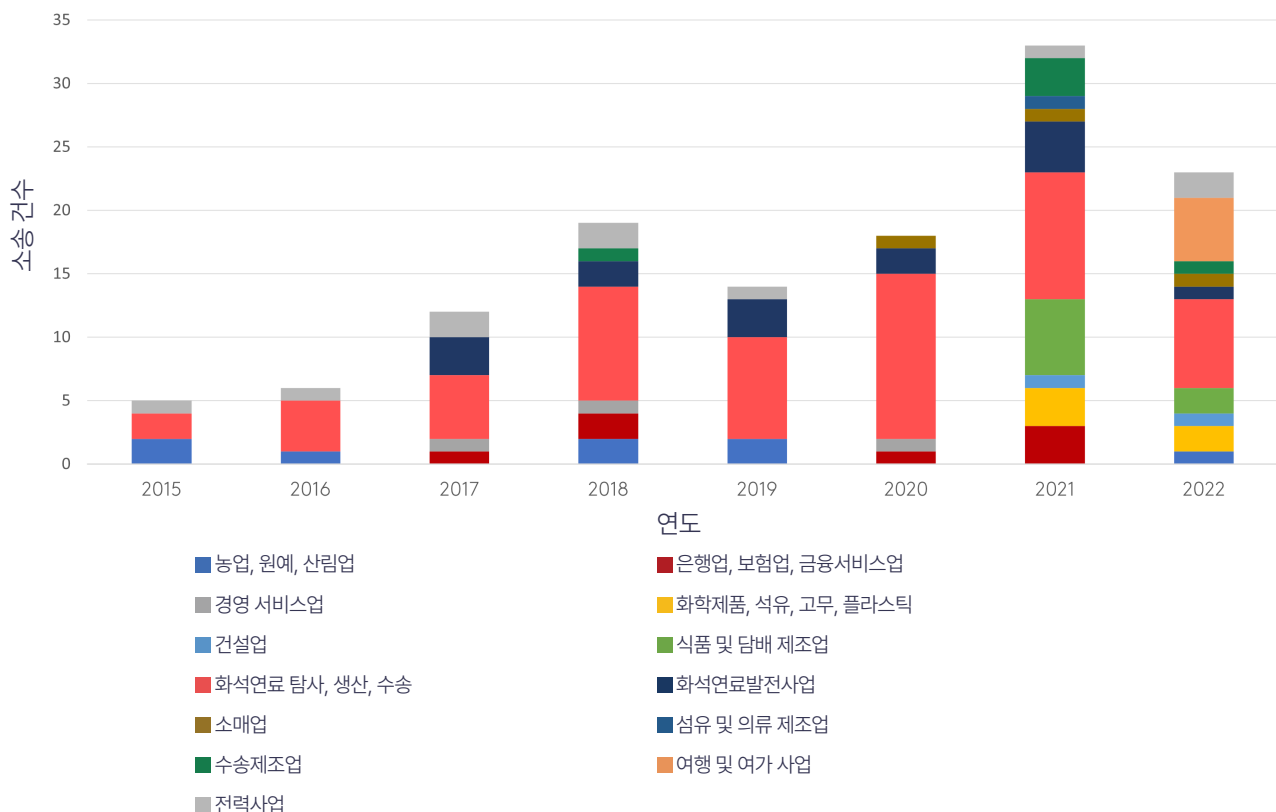
기업에 대한 전략적 소송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소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고 있다. 초기 단계의 기업 대상 전략적 소송은 대개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으며,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에는 기업 대상 전략적 소송의 양상과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 사례는 주로 기후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들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를 들며 기업, 금융기관, 무역협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ulle and Downie, 2022).

2015년부터 2022년 말까지 기업 대상 전략적 소송 사례를 모두 분석했을 때, 소송의 80%는 전략적 또는 반전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현재까지 기록된 건수 만 30건(2021년 기록된 전략적 소송 전체의 3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해였다. 해당 사례들의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을 비롯해 소송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그림 1.5 참조). 이러한 추세의 원인 중 하나는 '기후워싱(climate-washing) 사례'의 급증으로 보인다. 기후워싱 관련 소송은 자사의 사업, 제품, 서비스 등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에 책임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또 다른 원인으로 점차 소송 전략이 정교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새로운 압박 대상(특히 고배출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등)을 찾아냈기 때문일 수 있다.

소송 및 관련 행위자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기후소송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국 비교법연구소(BIICL) 주도로 기업계 전반에 걸친 기후소송의 특징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업의 기후 법률 전략에 관한 전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s on Corporate Climate Legal Tactics)'이 출범되었다.

그림 1.5. 분야에 따른 기업 대상 기후소송 사례(미국 및 해외 소송 포함, 2015~2022)



참고: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산업 분야'는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의 피고 기업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발전과 화석연료 탐사, 생산, 수송 관련 소송 사례의 경우 특히 수가 많은 관계로, 오르비스 데이터베이스가 구분한 기업 분야가 아닌 해당 소송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기후 관련 소송에 사용되는 전략의 유형

2022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기업 및 정부를 상대로 하는 기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사용한 전략 유형 분류법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없이 다양한 기후변화 소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자 소송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UNEP 참조, 근간). 본 보고서의 목표는 다양한 소송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상당수 소송은 동시에 여러 전략을 사용한다.

작년 보고서에서 이 분류법을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전 세계에서 제기된 '전략적' 및 '반(半)전략적' 소송 모두에 적용하였다. 올해 보고서는 이 평가법을 좀더 보완했으며, 특히 증가세를 보인 분야를 식별하였다. 또한 기후소송 분야가 발전한 만큼, 평가법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 보고서에서 '공적 금융' 유형을 포함시켰으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해당 범주를 확대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했으며 이 유형을 '수도꼭지 잠그기'로 명명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소송은, 설령 고배출 사업이 합법일지라도 그 사업을 지원하는 필수 자금의 조달을 막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소송 유형의 복잡성과 기후 위험과 관련한 법적인 의무 등은 제2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차적인 전략을 함께 사용한다.
-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권고적 의견 요청 3건을 포함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의 전략은 기존의 법정 싸움에서 사용된 전략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범주를 '글로벌 지침(Global Guidance)'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 본 보고서는 범주 일부의 상세 설명을 수정하여 예시로 든 사건의 다양한 유형을 좀더 확실히 구분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전 보고서에서 사용된 '배(보)상청구' 범주의 이름을 '배출자의 배(보)상'으로 수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략적' 또는 '반(半)전략적' 소송 사례 382건을 표 1.1에 정리하였다. (우리가 식별한 전략 유형은 430건이 넘으며, 전략 유형이 소송 사례보다 더 많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수의 소송이 여러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표 1.1. 글로벌 소송에서의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소송전략

전략 유형(예시 포함)	피고 유형에 따른 해당 전략 사용 건수	
	2022	2023
<p>정부 프레임워크: 국가 경제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목표 및 정책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목표 사건'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나 정책 대응의 부재, 적절성 또는 내용 등을 지적한다. 2) '집행 사건'은 기존의 목표 달성이나 기존 계획 시행을 위한 기후 보호 조치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Higham et al., 2022). 이러한 소송은 많은 경우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법의 유효성이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기후 행동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원고 측은 넓은 범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최근 예시: <i>Anton Foley and others v. Sweden</i>; <i>Iten ELC Petition No. 007 of 2022</i>.</p>	정부 (65)	정부 (81)

<p>기업 프레임워크: 이 유형은 기업의 거버넌스나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를 이끌어내 기업이 고배출 사업을 계속할 동기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 유형은 회사 전반의 정책 및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인권 및 환경 실사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송은 국가 법원에 제기된 바 있으며, OECD 국가 연락사무소와 국가 인권기구(두 사례 모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포함됨)에서도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유형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법적 논리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부와 기업의 의무는 명백히 다르므로 이들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p> <p>최근 예시: <i>Notre Affaire à Tous and others v. BNP Paribas; Greenpeace Italy et al. v. ENI S.p.A., the Itali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Cassa Depositi e Prestiti S.p.A.;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i></p>	<p>기업 (12)</p>	<p>기업 (16) 기업 및 정부 (1)</p>
<p>기후 관련 고려 통합: 어떠한 결정에 기후 관련 고려사항, 기준 또는 원칙을 포함하고자 하는 소송 유형으로, 유해한 특정 정책 또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 문제를 중점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기후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이나, 이미 존재하는 기후 정책의 실현에 해가 되는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는 고배출 사업 및 개별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p> <p>최근 예시: <i>Mexican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CEMDA) v. Ministry of Energy and Others (on the Energy Sector Program 2022); Dennis Murphy Tipakalippa v.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and Anor; R (Finch on behalf of the Weald Action Group and Others) v. Surrey County Council (and Others).</i></p>	<p>정부 (103) 기업 (20) 정부 및 기업 (4)</p>	<p>정부 (165) 기업 (22) 정부 및 기업 (12) 피고인 없음 (7)</p>
<p>수도꼭지 잠그기: 기후 행동과 어긋나는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을 막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 또는 양 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공통 목표는 금융 의사결정에서 기후 위험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고배출 사업이(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질 정도로 그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p> <p>최근 예시: <i>Conectas Direitos Humanos v. BNDES and BNDESPAR; Notre Affaire à Tous and others v. BNP Paribas.</i></p>	<p>정부 (n/a) 기업 (n/a)</p>	<p>정부 (14) 기업 (12)</p>
<p>적응 실패: 이 유형은 기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다. 이러한 소송은 1) 기후변화가 특정 시설이나 지역에 미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위험을 고려 및 해결에 실패 (Markell and Ruhl, 2012; UNEP, 2021), 또는 2) 물리적 및 전환 리스크를 식별 및 대응에 실패, 즉 저탄소 전환 '적응에 실패'(Golnaraghi et al., 2021)를 고발한다. 후자에 속하는 소송의 경우 대다수가 금융제공자를 상대로 제기된다.</p> <p>최근 예시: <i>S.S. Gölmarmara ve Çevresi Su Ürünleri Kooperatifi v. Republic of Türkiy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nisa Directorate of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i></p>	<p>정부 (3) 기업 (5)</p>	<p>정부 (7) 기업 (4) 개인 및 기업 (1) 피고 없음 (1)</p>

<p>배출자의 배(보)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들어 피고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배출자 배(보)상'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며, 고배출 활동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사용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거 및 현재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 2) 미래 기후 영향 적응에 예상되는 비용에 기여, 3) 피고의 활동이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을 훼손한 경우 배출의 상쇄를 위한 배(보)상 요구가 그것이다.</p> <p>최근 예시: <i>Asmania et al. v. Holcim; Ministerio Publico Federal v. de Rezende.</i></p>	<p>정부 (0) 기업 (8) 개인 (1)</p>	<p>정부 (5) 기업 (11) 개인 (1)</p>
<p>기후 위상: 저탄소 사회 전환과 관련해 정부 또는 기업의 부정확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형(Benjamin et al., 2022). 이 유형에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보다 더 기후친화적이라고 오인을 유발하는 주장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넷제로', '기후 중립', '산림훼손 없음' 등의 용어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은 대중을 오인케하는 캠페인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지 않거나, 기후변화 피해의 원인에 기여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p> <p>최근 예시: <i>Verbraucherzentrale Baden-Wuerttemberg v. DWS; 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 and others v. Volkswagen AG; Climate Alliance Switzerland v. FIFA.</i></p>	<p>정부 (3) 기업 (13)</p>	<p>정부 (5) 기업 (52)</p>
<p>개인 책임: 이 유형은 특정 개인에게 기후 위험의 적절한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공 및 민간 의사결정자들이 기후 문제를 더욱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소송은 주주들이나 연금 수혜자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치인(예: 브라질 보이소나루 전 대통령)과 기업 내 행위자(BP사 이사회 등)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변호사와 회계사처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책임을 논의하는 문헌 역시 증가하고 있다.</p> <p>최근 예시: <i>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i></p>	<p>기업을 대변하는 개인 (1) 정부를 대변하는 개인 (0)</p>	<p>기업을 대변하는 개인 (4) 정부를 대변하는 개인 (4)</p>
<p>글로벌 지침: 이 유형은 국제 법원의 권위를 기후 문제에서 이용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기후 외교뿐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국제국내 법원 및 재판소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략은 다른 기후 행동을 위해 더 탄탄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p> <p>최근 예시: ICJ, ITLOS, IACtHR에 제기된 자문 요청</p>	<p>비송(non-contentious)사건, 정부의 책임 관련 (1)</p>	<p>비송(non-contentious)사건, 정부의 책임 관련 (4)</p>
<p>참고: 여기서 다루는 기준은 국가의 법률, 국제 협약 또는 연성법(soft law) 등에 기반했을 수 있다. 소송 사례 다수는 기존의 법적 기준 적용의 범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환경 영향 고려 요건 등) '기후변화'가 법률이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다.</p> <p>2022년 사례 건수가 0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해당 유형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우리 측의 예상과 다르게) 2022년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사례 건수는 모두 소송의 실증적 검토에 기반한다.</p> <p>2022년 사건 수가 n/a로 표시된 경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이 범주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범주 내에서 피고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수도꼭지 잠그기' 유형은 이전 보고서에서 '공적 금융' 범주였으며 피고가 정부인 경우만을 포함했다).</p> <p>Notre Affaire à Tous and others v. BNP Paribas 사건은 '기업 프레임워크' 유형과 '수도꼭지 잠그기' 유형 모두에서 예시로 언급되는데,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주요 사례이기 때문이다.</p>		

제2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주요 추세 일부를 더욱 심도 깊게 들여다본다. 그렇지만 여러 소송에서 다양한 전략 조합이 사용될 수는 있으나, 소를 제기하는 측이 이러한 전략을 몇가지 공통된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간 화석연료 공급 활동 및 산림훼손과 토지 이용 소송에서 다양한 전략 조합이 나타났다. 이들 소송은 다양한 행위자(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 회사, 규제당국)와 화석연료 및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지점(인허가, 자금조달, 생산, 운송)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소송 진행과 같은 시기, 국제 및 국내 기후정책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및 산림훼손 없는 공급망 관련 논쟁이 점점 더 격화되어 왔다(van Asselt and Green, 2022; Partiti, 2021).



Held v. Montana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청년 Georgi 씨가 Seeley 판사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 Robin Loznak, Our Children's Trust.

기후목표와 불일치하는 사건 소송 전략

전략적 소송이 모두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2015년 이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략적 소송 중 기후목표 불일치 사건 16건을 찾아냈다.¹⁰ 이들이 사용한 전략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규제 권한 소송:** 소송인들이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기후 규제 도입 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이다.
- **좌초 자산:**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에 따른 조치로 소송인의 자산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이다. 이 유형은 손실의 회수(전략적 목표가 없음)뿐 아니라 정부의 추가규제 도입 또는 규제 철폐를 막으려는(전략적 목표)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분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 **공공 행동에 대한 전략적 소송:** 정부나 기업이 기후 행동 참여자들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들의 기후 행동 참여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처럼 기후목표와 불일치하는 전략적 소송 중 지난 12개월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신규 사례는 2건뿐이었다. 이 2건의 사례 중 1건은 벨기에 플랑드르(Flanders) 지역이 새로운 기름 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채택하자 이 규제에 도전했다 실패한 사례(*Belgische Federatie der Brandstoffenhandelaars vzw and Others and Lamine v. Flemish Government*)이고, 다른 1건은 독일 기업 RWE 및 유니퍼(Uniper)사가 네덜란드 법원에 '좌초 자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실패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 원고 측은 네덜란드의 단계적 탈석탄법에 따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RWE and Uniper v. State of the Netherlands [Climate and Energy Ministry]*). 네덜란드 국내 절차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의 ISDS 조항에 따라 기업들이 제기한 중재 요청과 병행되어 진행 중이다. 에너지헌장조약은 화석연료 투자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다(ClientEarth 2022 참조).¹¹

미국 내에서의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 사례는 자세히 문서화되어 있다. 최근 사례로는 미네소타주의 차량 온실가스 표준 도입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Minnesot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v.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과 로스앤젤레스의 유정 금지 조치에 제기된 소송(*Warren E&P inc. v. City of Los Angeles*)이 있다. 미국 내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 유형에는 'ESG 백래시 소송'이 있다. 2023년 5월, 공화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 23명이 넷제로 보험연합(Net-Zero Insurance Alliance, NZIA) 회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NZIA의 요구사항이 연방법 및 주법에 부합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내에서 커지는 정치적 압력과 '중대한 반독점법 리스크(material antitrust risks: Smith and Bryan, 2023)' 등으로 인해 여러 글로벌 보험사들이 NZIA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NZIA는 2021년 UN 기후정상회담 COP26 이전 영국 중앙은행의 전 총재 마크 카니가 창설한 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GFANZ)의 일환이다. 미국 공화당은 그들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부당한 타격을 가한다고 여기는 기후행동 그룹을 겨냥하고 있으며, GFANZ 및 그 회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최근 공화당 소속의 켄터키 주 법무장관이 미국 내 ESG 투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당 법무장관에게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 은행 협회와 서민금융기업(affordable financier)이다(*HOPE of Kentucky, LLC v. Cameron*).

10 이는 현재까지 기록된 기후 관련 ISDS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Fermeglia et al., 근간).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형의 주장이 중재재판소에서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1 해당 조약에 화석연료를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조약에 가입한 여러 국가들은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EU 전체의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Fermeglia et al., 근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 사례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그러한 소송을 '기후' 소송으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유럽에서 제기된 기후친화적 정부 조치에 맞선 소송 2건은 엄격히 말해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소송'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는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Exxon Mobil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석유가스 회사에 '황재세' 부과를 결정한 EU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이다. 이 소송은 분명 신규 규제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따라서 전략적 소송으로 간주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명확하게 기후 관련법이나 정책 이슈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Exxon Mobil사가 거명한 정책(RePower EU)의 주된 동기 역시 에너지 안보이며, 해당 소송의 논지는 EU 기관들이 그러한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Partington, 2022).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스키폴 공항에 제기한 2번째 사례의 경우 운항 비행편의 수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공항의 신규 조치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온실가스 배출보다는 소음공해 해결이 중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Taylor, 2023 참조).

정의로운 전환 소송

기후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기후행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소송을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기후목표와 불일치하는 소송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청구를 표현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Savaresi and Setzer, 2022).

현재 기후 영향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과 부담이 사회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분배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본인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틀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널리 부르기 시작했다. 노동 운동에서 기원한 용어지만, 현재는 더 넓은 의미로, 분배적, 절차적, 인정적 정의에 대한 질문을 다루기도 한다(Wang and Lo, 2021).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소송'은 기후행동을 위해 도입한 정책의 정당성과 공정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Savaresi et al., 검토 진행중). 정의로운 전환 소송은 전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노동자, 원주민·전통 지역사회, 여성, 아동, 소수자, 그 외 사회소외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집단이 혹은 피해집단을 대변해서 청구된다(ibid).

분류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몇몇 소송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기후행동이 불충분하다는 주장과 현 정책의 분배적 영향에 대한 주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예: *Mexican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CEMDA] v. Ministry of Energy and Others [on the Energy Sector Program 2022]*). 다른 *Regional Government of Atacama v. Ministry of Mining and Others (2022)*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는 전환 가속을 위해서, 채굴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소송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면서 정책을 다루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고배출 활동을 고착화하기도 한다(예: *ADI 7095 [Complejo Termeléctrico Jorge Lacerda]*).

기후소송의 결과 및 영향

기후변화소송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효과가 있는지"다.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하다. 기후소송의 결과로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소송 하나하나가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 소송의 영향력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송의 결과가 법적으로 피고(혹은 비슷한 위치의 잠재적인 행위자)의 행동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경우인 **직접적인 영향**과, 행위자의 비용·리스크 증가, 대중적인 인식 변화, 정책의 변화 등 다른 변화가 있는 경우인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뉜다(Peel and Osofsky, 2015; Setzer, 2022). 직·간접적인 영향의 구분뿐만 아니라, 결과와 영향을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성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공정적인 결과) 항상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etzer et al., 근간). 추가적으로, 영향은 실제 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발생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 그리고 종결 후 수년간 이해 및 행동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Solan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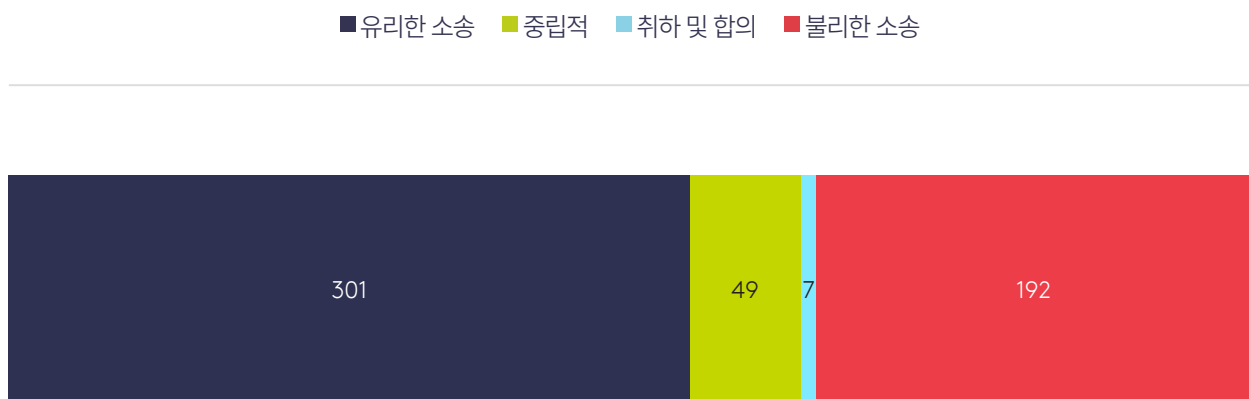
Peel et al. (2022)은 280건의 기후변화소송의 영향을 다룬 문헌을 검토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후변화소송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영향력이 생기는데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연구한 문헌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많은 문헌들이 최상위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나, 언론에서 자주 다뤘거나, 새로운 법적 이론이나 해석을 도입한 새로운 요소가 있는 사례 등 ‘인지도가 높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향에 대한 논의는 보통 짧고 추측성이 강했으며, 사건 진행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었다. Peel et al.은 서로 다른 소송 목표, 사법권 및 관할 법원, 혹은 법적 방법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추정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기후소송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이며, 장기적인” 연구에는 아직 공백이 있다(ibid: 16).

이런 한계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선 미국 외 지역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짧은 개요와 기후소송의 잠재적인 영향력(부록: 방법론 노트 참조)에 대해 이하 서술한다. 지난 몇 년간 제시했던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중간 혹은 최종 결과가 나온 사건들의 직접적인 사법 결과를 살펴본다. 그 후, 관련 소송이 각각의 행위자, 특히 기업과 금융 시장 행위자의 행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소송 결과: 혁신과 복잡성

현재까지 중간 혹은 최종 판결이 나온 549개의 사건 중 약 55%가 기후행동에 유리한 결과다(그림 1.6참조). 기후행동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지, 불리한 영향을 끼칠지 판단하는게 불가능할 경우, 중립적인 사건으로 분류된다. 또한, 원고의 모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긍정적인 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부록: 방법론 주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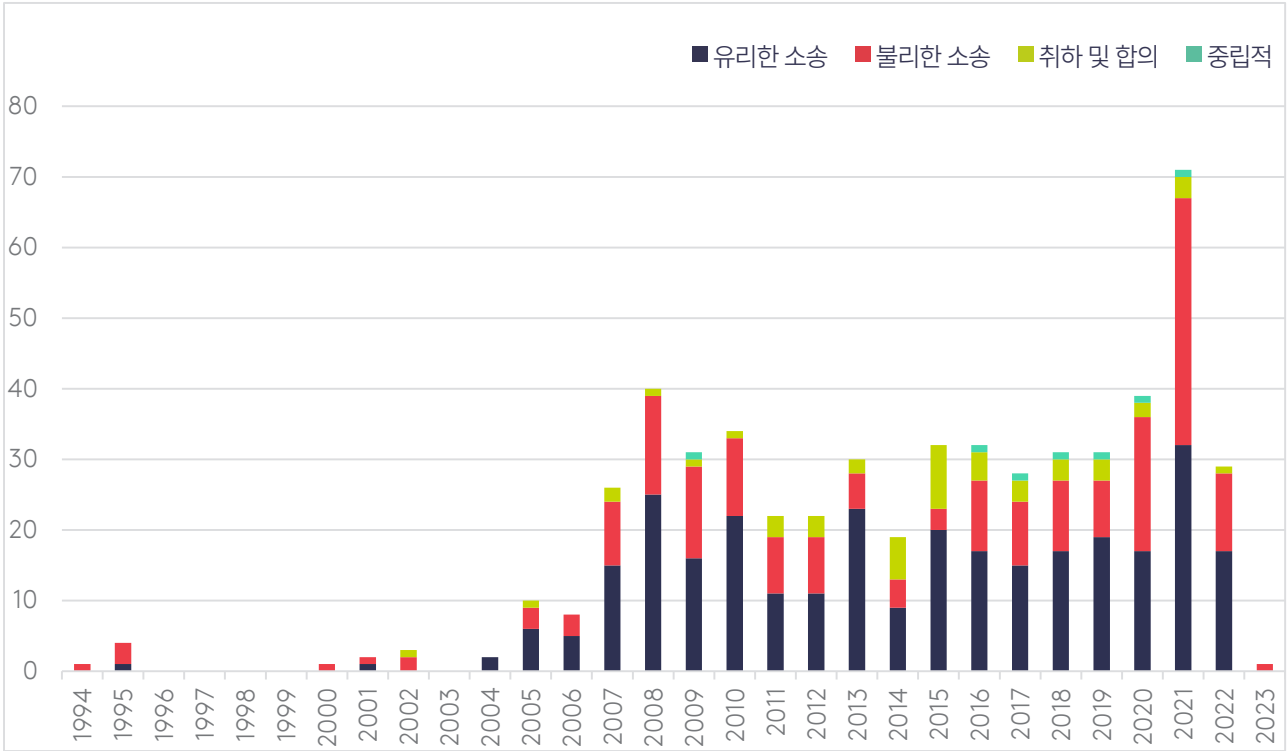
그림 1.6 국제 기후소송의 결과



출처: Sabin Center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저자들이 작성

하지만 이 그림은 사실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소송이 제기된 연도 기준으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진다(그림 1.7 참조). 2021년 독일에서 비슷한 사건 13개가 동시에 기각되어서 실패한 사건 수가 급증하긴 했지만, 최근에 청구된 소송은 유·불리한 결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물론, 최근에 청구되어 앞서 설명한 혁신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소송 중 대다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년 이후 미국 외 국가에서 청구된 사건 301건 중 161건은 여전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7



출처: Sabin Center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저자들이 작성

긍정적인 결과가 항상 명확한 영향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몇몇 사건의 경우 '유리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기후행동이 비교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사건이 이런 대비를 잘 나타낸다. 첫번째 사건은 호주에서 청구된 *Bushfire Survivors v. EPA* 사건이며,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2023-2026 기후변화 정책과 계획(Climatic Change Policy and Plan for 2023-2026)이 수립되고, "최종적으로는 배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나타나게 될" 절차의 시작이었다(Collins, 2023).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7월 선고된 영국의 *Friends of the Earth v. Secretary of State for BEIS (Net Zero Strategy)*이다. 해당 판결은 정부의 넷 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을 수정해서 투명성을 높이라는 법원 명령 이후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캠페인 그룹의 승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Higham and Setzer, 2022). 하지만 이후 정부가 법원 명령 및 지도부 교체로 인해 전략을 개정해 발표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전안보다 서약이 몇몇 분야에서 "축소" 되었다(Dehon and Parekh 2023). 해당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방향성이 다시 바뀔 수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프랑스 국참사원의 *Grande-Synthe v. France* 판결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어렵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입법화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법원은 정부의 진행상황을 검토 후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이전 명령을 따르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진행상황을 보충할 수 있는 신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일년 내로 제시할 것을 명했다(APF, 2023).

기후소송으로 인한 기후행동이나 정책 변화와 연관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Mayer (2022)는 심지어 소송이 새로운 법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탄소배출을 '넘기는'(흔히 탄소누출이라고 부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실증적인 분석은 이런 현상이 현존하는 여러

법률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찾지 못했고(Eskander and Fankhauser, 2023), 소송의 결과로 생기는 법률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소송의 간접적인 영향

결과를 넘어서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더 복잡한 상황이 보이게 된다. 앞서 서술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분야를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후리스크' 증폭

금융권은 기후소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이다. 작년 보고서에서 기후소송 분야의 핵심 전문가 커뮤니티 외부에서도 기후변화 소송이라는 현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증가함을 인지했다. 이 사례를 소송리스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잉글랜드 은행(영국중앙은행)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기후소송 언급과 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기후소송에 대한 논문을 레퍼런스로 인용했다(Higham and Setzer, 2022).

지난 12개월간 기후금융 리스크 포럼(Climate Financial Risk Forum, CFRF), 영국에서는 기후관련 리스크 및 기회 관리에 대한 경험공유를 위해 금융계 중견급전문가들을 모은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PRA)과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공동 이니셔티브 등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들도 기후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CFRF는 보험사 및 유관 이해관계자들의 기후소송 리스크 관리 및 완화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12월 보고서를 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후소송 리스크가 보험업계에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물리적인 보험 위험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올해 처음으로 다보스(Davos)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패널을 일정에 포함했다.

여러 국제·지역 단체는 기후소송을 점점 인식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 평의회 의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사안"의 일환으로 2021년에 각료위원회가 "국가적

기후소송 사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것을 추천했다. 각료위원회는 이 추천사항을 받아들여 유럽법률위원회(European Committee on Legal Co-operation)에 기후소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UN 기후변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Climate Change)은 최근 "기후변화 입법, 기후변화 소송 지원, 그리고 세대 간 정의 원칙의 전진"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추가적으로, 법조계 전반에 현 상황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상자 1.3 참조).

상자 1.3. 기후변화와 법조계: 기후인지적 법률 활동이 주류가 되었나?

기후변화소송 증가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학계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분이 변해야 한다는 점점 긴박해지는 경고에 따라 법조계 전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매출 기준 세계 탑 10 로펌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보고서나 논평을 최근에 발간한 바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 협회, 판사 협회 등의 협회들은 해당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Dernback et al., 2023; ELF 및 CCBE, 2023; EUFJE, 2022 참조).

변호사 사회와 특정 사법권에서 변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법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에서 2023년 4월 출간한 가이드는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탄소배출은 본인의 전문 분야 관련 배출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는 Bouwer (2015)가 창시하고 뉴사우스웨일스 토지환경법원장(Chief Justice of the Land and Environment Court of New South Wales) 브라이언 프레스턴(Brian Preston)이 유행시킨 개념인 '기후인지적 법률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Preston, 2021). 해당 개념은 법조인에게 기후변화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을 요구하고, 일상 업무에서 접하는 법률적인 문제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다.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

투자자들도 기후변화 소송을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장이 체계적으로 기후소송 리스크를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기후소송의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한정적이다. 최근 기후소송이 체계적으로 피고 기업의 주가하락을 야기하는지, 야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 진행되었다(Sato et al., 2023). 해당 연구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후소송으로 인한 가치평가 결과의 변화를 확인했다. 기후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청구가 이루어지거나 불리한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기대치와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0.41% 하락하였다. 가장 큰 주식시장 반응은 탄소메이저를 상대로 청구된 소송에서 나타났는데, 청구 직후 기업가치가 -0.57% 하락했으며, 불리한 판결 이후에는 -1.50% 하락했다. 보다 격한 시장 반응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주장이나 새로운 관할권에서의 소송 등 '신규' 요소가 포함된 사례에서 나타난다. 해당 연구는, 관찰된 기업 가치의 하락은 시장이 이미 소송 리스크에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이나 금융규제 기관, 정부는 기후소송을 실질적인 리스크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내러티브 형성

기후소송의 영향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절차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유로 기후소송이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Setzer and Bouwer (2020)는 이러한 현상을 "내러티브를 형성"한다고 표현했다. 지난 12개월간 있었던 새로운 사건들의 발전과정이 이런 현상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ClientEarth는 2021년, 벨기에 국립은행을 상대로 유럽중앙은행(ECB)의 회사채 매입 제도 도입에 관하여 소를 제기했다(ClientEarth v. Belgian National Bank). 해당 제도는 ECB 통화 정책의 일부였고, 본래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 유지 의무만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이는 매입된 채권이 유럽 내 가장 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회사들의 고탄소배출 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ClientEarth는 해당 정책이 유럽의 기후 목표와 파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ClientEarth는 항소했으나, ECB가 파리 협정을 보다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을 변경해 기후친화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신규 채권 매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이후 2022년 11월 언론 발표를 통해 소취하 소식을 알렸다. 해당 사건과 ECB 결정 간의 정확한 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당 사건은 기후소송이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기후 거버넌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시로 남아있다.

제2부: 소송 동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된 기후변화 소송의 지형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확인된 전략들 간의 연관성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 분석은 필수적인데, 사건들을 행위자의 종류, 지역, 혹은 전략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사건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나 각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결정절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후에는 법적 논쟁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후 정책 분야에 집중해서 장래 소송 동향을 설명한다.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발전: 인권과 기후법률의 역할

지난 12개월간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이 유형의 소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체계적인 기후소송(Kelleher, 2022)이나 '우르헨다 스타일' 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후자는 주요 판례인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에서 기인한다)(Maxwell et al., 2022). 이런 소송은 보통 정부의 범경제 기후 대응 정책 목표나 시행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기후소송 중 가장 잘 알려진 하위 종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들은 다른 관할권에서의 눈에 띄는 성공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

기후소송이 있었던 51개국 중 31개국에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국제 법원, 지역 법원 및 위원회에서 관련 소송이 다루졌다. 2022년에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웨덴, 핀란드에서 첫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있었다. 2023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해외 영토인 Bonaire에서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기록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의 약 70%가 헌법 또는 인권에 근거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Higham et al., 2022).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은 국가의 기후행동 목표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소송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조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국내 기후법률이나 헌법적 보호조치가 국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전에, 국제·지역 인권 단체에 제기된 소송들의 최근 진전상황을 살펴본다. 그 후에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을 넘어,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인권 관련 주장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 조약의 활용

지난 12개월 간 지역 내에서 있었던 국제법학상 주요 사건 중 하나는 UN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결정한 *Daniel Billy and others v. Australia*이다. Torres 해협 거주민들은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특히 제27조(문화에 대한 권리), 제17조(사생활, 가정,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제6조(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하며, 호주 정부의 부작위가 사생활, 가정,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결정은 토레스 해협 제도의 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조치가 부적절한 점에 집중한 것이었고, 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경감)에 대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의 의욕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한 인권 보호 의무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향후 몇 달 이내에 유럽인권재판소가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상자 2.1 참고).

상자 2.1 유럽인권재판소가 심리 중인 기후소송: 유럽의 차세대 기후소송을 형성중인가?

2023년 3월, 기후소송 맥락에서 다시 한번 국제인권법상 큰 발전이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기후소송 두 건,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그리고 Careme v. France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대재판부에 회부된 세 번째 사건인 Duarte Agostinho et al. v. Portugal and 32 Others은 2023년 9월 27일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 상황은 특히나 의미가 큰데, 현재까지 청구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중 절반 이상이 유럽 국가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Setzer et al., 2022).

현재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의 환경 문제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을 때(유럽인권재판소는 약 300개의 환경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ECHR, 2022)) Strasbourg 시스템은 장래 기후소송 당사자들에게 가능성을 시사한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유럽 인권 조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받지는 않지만, 법원은 정부가 시민들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특히 사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유럽 인권 조약 제2조, 제8조).

해당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추측이 늘고 있다. 청구인들이 성공한다면 해당 판결은 주요 판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장래에 있을 유럽 및 그 외 지역에서 기후변화 측면의 정부의 인권 의무 관련 판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Heri, 2022).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명령을 통해 각 정부가 입법 및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배출량 감소 목표 등 세계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Keller et al., 2023의 잠재적 해결책 참조).

하지만 청구인들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여럿 있는데, 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피해자 지위'를 증명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Careme 사건에서 재판부가 했던 질문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안은 최종 결정에 매우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법원이 국가의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거나, 청구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추가적인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법상 보호제도의 중요성

국내법상 보호제도가 성공적인 프레임워크 소송의 기반이 된 사례도 있다. 두 가지 청구 형태가 특히 눈에 띄는데, 헌법상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¹²에 근거한 청구나 기후 프레임워크 법률에 기반한 청구가 있다.

2019년 UN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의하면, UN 회원국 중 80% 이상이 국내법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UNHRC, 2020). 이 권리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점점 더 많은 소송의 근거가 되고 있다(de Vilchez and Savaresi, 2023). 또 아프리카의 국내 및 지역 법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Bouwer, 2022; Loser, 2023). 이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소송 국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Our Children's Trust의 지원을 받는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Held v. Montana 그리고 Navahine F. v.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단

12 몇몇 기후소송 주장은 다른 헌법적인 권리에 근거하기도 하는데,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으며,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특히나 동력을 얻고 있다.

두 사건만이 최초의 절차적 단계를 넘어 실제 관련 재판을 받게되었다. 하와이와 몬타나는 모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Gerrard, 2021).

동시에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법률이 새로운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어, 프레임워크 및 부문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에서 과거 성공적이었던 프레임워크 소송을 토대로(see Higham and Setzer, 2021 참조) 독일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독일의 기후 프레임워크 법률의 부문별 목표를 활용해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독일의 기후변화 전문가 위원회(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의 계산에 따르면 현 대책은 부문별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부족하므로 운송부문에서 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참조). 이와 유사하게 법적 의무에 기반한 소송이 핀란드에서 제기되었으며, 정부의 탄소 흡수원 보존 실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Held v. Montana사건의 청소년 원고들이 2번째 재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 로버트 로즈낙(Robin Loznak)/Our Children's Trust.

또 다른 특정 사업 관련 소송에서 있었던 획기적인 인권 기반 논리는 2023년 3월 하와이 대법원의 *In re Hawai'i Elec. Light Co.* 결정에서 나왔다. 해당 사건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회사인 Hu Honua사의 항소로, 하와이 주 공공사업위원회(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Hu Honua사와의 에너지 공급 계약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사업 제안자의 탄소 상쇄 계획은 추측성이 매우 강하고, 가장 좋은 상황 가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하와이 주법상 하와이 주가 기후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인 2047년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 Michael Wilson은 동의 의견을 내면서, 해당 판결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권리"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했다. 오리건 법원도 해당 권리를 주요 프레임워크 판례인 *Juliana et al. v. US* (항소심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수정된 청구사항을 받아들여 재판 예정이다)에서 인정했고, 판결을 기다리는 *IEA v. Brazil*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Setzer and Carvalho, 2021). 그러나 안정적인 기후에 대한 권리의 법적 인정은 아직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며(Jegede et al., 2018), 대부분의 인권 소송은 기후변화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혹은 이미 확립된 다른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책임 소송의 영역: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 손실과 피해

기업,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공동체·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시도는 기후소송 초창기 법조계의(그리고 더 많은 분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제기된 초창기 기후소송 몇 건이 실패한 이후, 기후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잠잠했던 시기가 10년 정도 이어졌다. 하지만 2014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약 100개의 기업(탄소메이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상황은 바뀌었다(ibid; Heede, 2014도 참조). 해당 연구는 기업 상대 기후소송 '제2의 물결'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했고, 소송의 상대방은 주로 탄소메이저 기업들이었다(Ganguly et al., 2018). 전 세계에서 59건의 소송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그 중 20건은 미국의 도시 및 주에 의해서 제기되었다(상자 2.2 추가 참조).

기업 책임 소송의 '제2의 물결' 사건들은 청구 취지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Setzer, 2022). *Liluya v. RWE* 같은 '소급적' 오염자 부담 원칙 관련 소송은 기후변화와 기업의 과거 활동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고,

상자 2.2 미국 도시·주의 탄소메이저 대상 소송은 이제 주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

여러 도시 및 주가 벌이는 탄소메이저 상대 소송의 난점 중 하나는, 주 법원에서 사건을 '제거'하고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려고 하는 피고의 대응이다. 이 절차적인 분쟁을 해소하는데 5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드디어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2023년 3월, 주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주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심의하던 모든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사건들은 주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Anderson and Sutherland, 2023). 이후 피고들의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법원은 대법원 소송에 관해 연방정부를 대변해서 발언하는 송무차관의 의견을 요청했고, 송무차관은 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4월 연방대법원은 심의를 불허했다(상고신청 기각)(*City of Hoboken v. Exxon Mobil Corp.* 참조). 이는 추가적인 절차적 지연을 야기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이 주 법원에서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과거·역사적인 책임에 근거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Milieudefensie v. Shell* 사건과 같은 '장래에 대한'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은 빠르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합의에 근거해 기업들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번째 종류의 소송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기업들의 현재·미래 활동이 파리협정의 목표와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한다. 보통 '소급적' 소송이 보다 어려운 인과관계 증명 문제에 직면하는데, 청구인들은 과거 기업의 행위가 피해 혹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귀인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후 적응 및 손실 소송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Otto et al., 2022; Wentz et al., 2023).

최근 몇 년간 기업 상대 '제2의 물질'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진전상황이 있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유사한 동향의 결합

인도네시아 섬 주민들이 7월 스위스 법원에 청구한 소송인 *Asmania et al. v. Holcim*에서는, 소급적 그리고 장래에 대한 주장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건축사재 회사이자 탄소메이저인 Holcim사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법에 근거한 정확한 법적 논거는 공개된 문서로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Richard Heede의 새로운 연구가 해당 소송에 도움이 되었는데, Holcim사가 1750년 전 세계 산업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42%를 배출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Heede, 2022). 청구인들이 청구한 것은 피고에게 파리 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 빠른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과 피고에게 섬의 기후적응비용 중 일정 비율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의 많은 요소들이 작년에 마무리된 필리핀 인권위원회(Philippine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선구적인 탄소메이저 조사(제1부 참조)에서 이미 예고되었지만, 해당 사건은 배출량 감소라는 기업 인권 책임과 적응 비용 지불이라는 주장을 처음 제시한 사건이다.

이전에 관찰된 여러 접근법을 합친 또 다른 사례로는 *Greenpeace Italy et al. v. ENI S.p.A.*, the Itali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Cassa Depositi e Prestiti S.p.A.가 있다. 해당 소송은 12명의 이탈리아 시민과 두 NGO가 화석연료기업인 ENI 및 ENI의 두 대주주인 이탈리아 경제금융부와 이탈리아 개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Milieudefensie et al. v. Shell* 사건을 토대로 ENI의 탈탄소화 전략이 파리 협정 목표 혹은 최신 과학의 결론과 부합하지 않고, 환경 및 보건 리스크를 초래하며, 이탈리아 헌법과 국제 규범 및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이탈리아 대법원이 해당 기업 및 정부기관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있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명령을 통해 ENI의 활동 관련 배출량을 2030년까지 회사가 제시한 2020년 기준 대비 45% 감축할 수 있도록 산업 전략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명의 시민 또는 다른 주체에 의한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원고측은 ENI가 판사의 결정에 따른 일정액의 벌금을 명령 위반, 불이행, 혹은 실행지연에 대해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rasso and Heede (2023)의 새 연구는 이런 소급적·장래에 대한 주장을 결합한 소송에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세계 선두 화석연료기업 중 21개 기업에게 매년 2090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의 책임이 있다고 제시한다. 해당 논문은 2025년-2050년 사이 가뭄, 산불, 해수면 증가, 녹아내리는 빙하 등 기후 관련 재난의 경제 피해 예측을 탐구한다.

현재·과거 손실의 강조—손실과 피해

두 번째 주요 동향은(*Liluya v. RWE* 사건의 경우처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피해 적응 비용과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강조 현상이다(Tigre and Werewinke-Singh, 2023). 앞서 언급한 *Asmania*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의 한 측면은 원고가 2021년 파리섬에서 겪은 기후변화 관련 홍수로 인한 가정 및 생계에 대한 피해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게, 이미 발생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주장도 미국 내 오염자 부담 원칙 소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Silverman- Roati and Tigre, 2022).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Municipalities of Puerto Rico v. Exxon Mobil Corp*에서 원고측은 푸에르토 리코의 여러 공동체가 2017년 허리케인 Maria 그리고 2022년 허리케인 Fiona로 인해 입은 "종합적인 손실"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허위정보에 대한 집중의 증가

세 번째 동향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트렌드의 연장선으로, 기업들의 기후 관련 허위정보에 관한 증거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다. 푸에르토 리코 사건은 이 현상의 흥미로운 발전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화석연료기업이 직접적으로 혹은 제3자를 통해 발표한 기후변화 피해 및 화석연료 사용의 장점에 대한 오랜 기간의 대중적 기만은 수익을 위해 대중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소비자 기만 혹은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주장은 있었지만(이런 주장이 포함된 사건을 '기후 위상'이라고 분류하게 되었다. 이하 참조), 푸에르토 리코 사건은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에 근거한 최초의 도시 집단 소송 사례이며, 1990년대 후반 법무부가 담배업계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기반을 두고 있다(Silverman-Roati and Tigre, 2022). 다른 도시·주 관련 사건들처럼, 해당 사건도 소송요건에 관련한 절차적 논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다른 도시·주가 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다뤘다면(상자 2.2 참조), 해당 사건은 명확히 연방 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분야도 연구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Science라는 학술지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Exxon사의 기후과학 관련 공식 발표는 Exxon사의 과학기반 자료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한다(Supran et al., 2023).

탄소메이저 외 기업으로의 확장

마지막 주요 진전 사항은, 탄소메이저 그룹 외의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장래에 대한'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의 확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부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파리협정 부합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장됨에 따라 '장래에 대한' 소송이 과거 피해에 기여한 규모가 정량화되지 않았어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최소 4건의 소송이 자동차 제조사 상대로 제기되었는데, 해당 소송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었다. 해당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항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독일의 소송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DUH v. Mercedes Benz*가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Neubauer et al. v. Germany*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헌법적인 권리 보호의무 주장을 기반으로 논리를 펼쳤지만, 후자의 사건에서의 보호의무는 기업이 아닌 입법기관에 부여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인권 관련 청구를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다(*Milieudefensie v. Shell* 사건의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Macchi and van Zeven, 2021도 참조). 더욱이 '장래에 대한' 실사기반 주장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른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하 BNP Paribas사 상대 소송 관련 논의 참조).

기후 리스크 관리: 온난화 시대에서 좋은 투자란?

이전 섹션에서는 기업 활동이 기업이나 기업 외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초점을 둔 사건을 다뤘다. 이하에서 다룰 사건들은 기업/법인, 투자자, 수혜자(연기금일 경우)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기업 및 금융법상의 기본적 법적 의무를 해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두 유형의 사건들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 목표 아래 유사한 전술을 택했을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 매우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두 유형 모두 고배출 행위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섹션에서 다뤄질 사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기업 및 재무 의사 결정권자의 수익성 요건에 관련되어 있다(Bakan, 2021 참조).

주주들이 이미 일어난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제기한 초기 소송

주주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초기 소송에는, 근무하던 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연기금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석탄 산업 근로자를 대표하여 제기된 소송이 여러 건 있다. 청구인들은 미국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 변화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펀드 매니저는 손실을 미리 예측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ynn v. Peabody Energy*; *Roe v. Arch Coal* 참조). 해당 사건들은 '좌초 자산' 리스크와 특정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의사결정자가 그 자원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예견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2016년 제기된 *Ramirez v. Exxon Mobil* 집단 소송 사건에서는 한 주주가 Exxon Mobil이 전환 리스크에 대한 내부 평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곧 증권 사기에 해당하며, 허위 정보가 정정되었을 때는 이미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Exxon Mobil사의 이사들이 기후 위험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시를 허용함으로써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파생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단일 사건으로 통합되었다(*In re Exxon Mobil Derivative Litigation* 참조).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최근 사건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최근 사건에서 분쟁 대상이 된 행위는 **이미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가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다.

예측된 장래 영향에 초점을 둔 최근 사건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와 같은 최근 사건은 이미 벌어진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ClientEarth는 Shell사의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이 2006년 영국 회사법(UK Companies Act)에서 명시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 이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한 해 Shell사와 같은 석유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 경영진이 새로운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단기 이익이 결국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의 서면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ClientEarth가 회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은 것이며, '부수적 의무'라고 판단했다. ClientEarth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현재 접근법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 대응 범위를 벗어나 Shell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증명했어야 했다. Shell사가 탄소중립 전략을 채택하고 기후 위험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기업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기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ClientEarth가 명확한 외부 어젠다를 가진 NGO라는 점을 참고했다.

현재 ClientEarth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두 심리를 요청한 상태이다. 많은 회사법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사회는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문턱이 높아 ClientEarth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향후 다른 관할권에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다 우호적인 국가에서 연기금과 같은 대규모 자산 소유자가 탄소중립 전략이 없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지적했던 일부 장애 요소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이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성 목표에 더 광범위하게 부합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Fiji의 기후변화법(Climax Change Act)은 회사법(Companies Act)에서 명시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행동할 의무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예측 가능한 선에서 기후변화 위험성과 기회를 평가하고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Chan and Higham, 2023 참조). 유럽의회도 최근 기업 경영진에게 기후전환 계획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초안을 승인했다.

이 사건은 최종 결과와는 무관하게, 과학계가 보낸 다급한 경고에 직면한 의사결정자들이 적절한 시간 지평을 가졌는지를 조명했다. 첫째, 현 시대의 의사결정자가 지구 공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사건 분류에서 '개인 책임'을 강조함)과 둘째, 그러한 의사결정자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느껴지기 전에 내재된 사고 방식을 반드시 바꾸는 것, 즉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반드시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뤘다('적응 실패' 사건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물리적 '적응 실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Markell and Ruhl, 2012; UNEP, 곧 발표 예정]). *Shell사 이사회 사건*은 현재까지 기업의 신중한 경영을 위해 모든 신규 화석연료

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일한 사건이며, 폴란드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 사건과 유사한 논리를 적용했던 *ClientEarth v. Enea*와 *McVeigh v. REST* (연기금 운용사의 의무 관련)에서 제기된 일부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Setzer and Higham, 2021 참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소송

의사결정자가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거나 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재무 관리에 대한 고전적 이해와 온난화 시대의 좋은 투자 관행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이해 사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균형잡기는 2022년 영국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Butler-Sloss v. Charities Commission*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주요 자선기금의 신탁 관리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신탁 관리자는 투자 결정을 파리 협정과 같은 환경 목표, 즉 각 자선기금의 사명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곧 자선기금의 투자 수익률 저하를 의미하더라도 신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자 했다. 법원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향후 많은 분쟁에 유의미한 선례를 남겼다.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정량적 모델에 의존하는 현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기후 변화라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는 모든 소송의 원인과 피고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Donald, 2023 참조). 그러나 이 분야에 내재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과 금융기관 내 최고 경영진, 비상임이사, 수탁자와 같은 고위 인사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택하고, 어디에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의사결정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행동함으로써 행위자는 잠재적 소송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직무 수행을 합리적 판단여지 내에서 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후위험 및 친환경적 주장

기후변화에 대한 허위 정보와 관련된 소송은 새롭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법원 및 소비자 보호 기관과 같은 행정 기관에 제기된 '기후위험' 관련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그림 2.1 참조). Benjamin et al. (2022)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허위 정보와 관련된 특정 유형 사건을 칭하기 위해 '그린위험' 대신 '기후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당 용어의 정의에는 다음의 사례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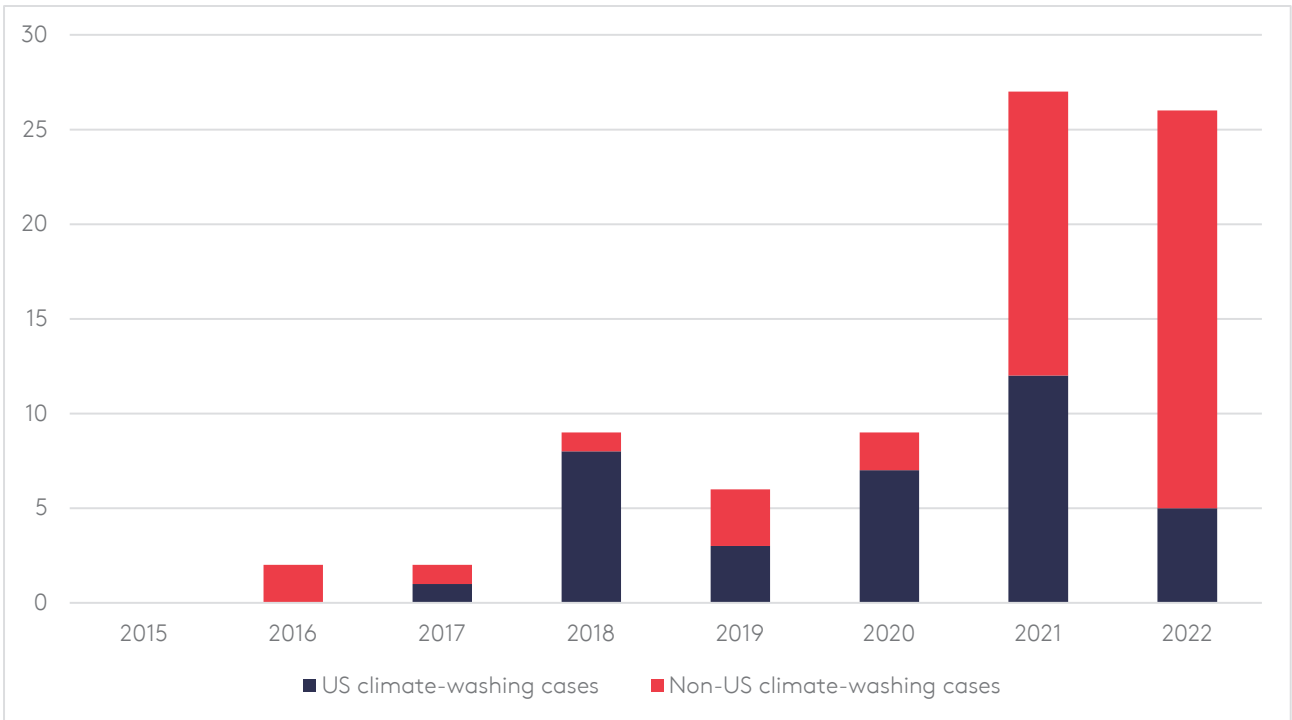
- **기업의 기후 공약.**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장 중요한 기후위험 사건들 중 하나는 기업의 기후 공약의 진실성(특히 적절한 계획과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Wonnarua 원주민(Plains Clan of the Wonnarua People)과 Lock the Gate 연합(Lock the Gate Alliance)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Glencore를 상대로 제기한 것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위 사건에서는 Glencore의 지속적인 석탄 생산 확대가 탄소중립 공약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제품 속성.** 지금까지 확인된 기후위험 소송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 제품 라인의 환경 영향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지난 12개월 간 확인된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일어났고, 쓰레기 봉투부터 바나나까지 '기후중립', '탄소중립' 혹은 '이산화탄소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법정 밖에서, 환경 변호인 사무소(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그린피스 호주 태평양 지부를 대변함)는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Toyota 차량의 환경 관련 성능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에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기만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기후행동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과장하는 경우.** 이전에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기업 투자를 과장하여 광고하는 캠페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ClientEarth v. BP 참조). 작년에는 이런 소송이 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기관 투자자 그룹이 Volkswagen을 상대로 Volkswagen의 기후주장과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기업에 로비하는

행동이 불일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Danish Akademiker Pension and the 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 v. Volkswagen 참조). 또 다른 예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미국 기관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Global Witness가 Shell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있다. Global Witness v. Shell은 Shell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과장하여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Shell이 주장한 12%가 아니라 1.5%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 **기후리스크 은폐.** 이 사건 유형에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유의미한 기후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사건과 은행 및 금융 기관에 의한 공개 요청이 있다(Abrahams v.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참조).

지난 12개월 간 있었던 또 다른 흥미로운 진전은 호주에서 “국가가 후원하는 그린워싱”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EU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제기된 것으로, ‘climate active’ 상표(기업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인증하게 하는 정부지원 인증 제도)에 관한 것이다. 원고 Australia Institute는 이 제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유럽 NGO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연합의 새로운 Green Taxonomy에 천연가스를 저탄소 전환 연료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유사한 이유로 Green Taxonomy에 이의를 제기한 오스트리아와 유럽의회 소속 의원의 사건들도 현재 계류 중이다(Higham et al., 2023 참조). 이 사건들이 정부나 정부 기관이 관여된 소송 중 기후워싱과 관련한 첫 번째 소송은 아니다. 연방 탄소가격 제도에 대한 광고 캠페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Ontario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Total사의 루브르 박물관 후원과 관련하여 프랑스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기후 관련 주장 확산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상자 2.3 참조).

그림 2.1.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기업에 대한 기후위성 소송, 2015-2022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기후위성 사건의 증가는 기업의 기후선언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서 기업이 가지는 역할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한 결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정책 프로세스에는 유엔 사무총장 산하 비국가 행위자 탄소중립 선언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High Level Expert Group on Non-State Actor Net Zero Commitments)이 있다.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예상되는 행위 기준을 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고 사항(선언에 관련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소송에 유의미한 보고서로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정보의 명확성, 투명성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개정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OECD,202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 전에도 OECD 국가 연락 사무소(NCP)에 제기된 기후위성 사건은 기업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NCP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NCP에 보다 권위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워싱 의심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익제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Aristova et al, 2023).

그 외 여러 법률과 표준도 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 2023년 3월 친환경 표시지침 초안(Directive on Green Claims)을 채택했고, 영국에서는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환경 관련 주장이 적절하게 입증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범을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후 및 ESG 관련 공시와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 관련 위법 행위를 사전에 식별하는 이니셔티브를 고안하기 위해 기후 및 ESG 태스크포스(Climate and ESG Task Force)를 출범했다. 이처럼 입법자와 규제기관의 일관된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보다 전반적인 '방향성'을 법원에 제시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상자 2.3 참조)

상자 2.3. 기후 해법의 청렴성 강화

기후위험 소송과 기후위험을 폭로하기 위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입법과 규제 당국이 다방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Grantham Research Institute와 로펌 DLA Piper가 진행 중인 연구에 따르면 정직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관행이 기후 해법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명백한 형법 위반부터 기존 규제법 위반, 민법 위반 또는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청렴하지 못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기후 해법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는, 기후기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기 및 부패 혐의, 자발적 탄소 시장 내 사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상당수가 기존 법체계안에서 처벌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집행당국의 더 많은 표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고배출 행위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전략

소송 당사자들은 고배출 행위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주로 화석연료 공급 행위와 산림을 파괴하는 농산물을 겨냥한 종합전략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조직적인 노력으로 화석연료 및 농산물의 허가, 자금 조달, 생산, 운송 및 상업화를 진행하는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 기업, 허가 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 됐다.

화석연료의 전체 생애주기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공급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개입 방식은 개별적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승인이나 화석연료 탐사면허 부여에 대한 이의제기('기후 고려사항 통합' 사건)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는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화석연료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Scope 1,2)보다는 화석연료 사용시 배출량을 평가하는데 실패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cope 3). 이 전략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3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이 예상되는 캐나다 Newfoundland 주의 Bay du Nord 개발에 대한 이의 제기(Sierra Club Canada Foundation et al. v. 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t al.), 독일의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신규 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Deutsche Umwelthilfe v. State Office for Mining, Energy and Geology*)와 같이 많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이 작년에 제기됐다.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뿐 아니라, 2023년 2월 프랑스에서 BNP Paribas사가 투자자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 공개, 완화해야 하는 프랑스의 '경계 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화석연료 공급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 사례도 볼 수 있다(*Notre Affaire à Tous Les Amis de la Terre, and Oxfam France v. BNP Paribas*). 소송이 제기된지 3개월 후, BNP Paribas사는 2030년까지 석유 탐사와 생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80%까지 줄이고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BNP Paribas, 2023). 그러나 발표 이후 원고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은행의 지원은 대부분 기업 대출과 채권 인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BNP가 새 정책에서 언급한 직접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White and Bryan, 2023).

또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 금융 기관과 규제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지난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파트 1에서 언급한 브라질 개발은행 사건 외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UK's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석유 및 가스 회사 투자 설명서를 승인하면서 유의미한 기후리스크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었다(*ClientEarth v.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Ithaca Energy plc listing on London Stock Exchange*). Friends of the Earth가 영국 수출 금융청(UK Export Finance)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영국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파리협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 재정 흐름을 저탄소 전환 목표에 맞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이 사건은 이제 영국 대법원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Friends of the Earth v. UK Export Finance*).

화석연료 공급을 겨냥해 종합적 전략을 사용하는 동향은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확인된다.¹³ 여기에는 Earthjustice와 Trustees for Alaska가 향후 30년간 약 2억 6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알래스카 서부 북극의 Willow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Deadly Air' 소송은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유독한 수준의 대기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15페이지 참조).

사진: Daylin Paul.

13 Alaska Willow와 같은 미국 사건은 표 1.1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다 광범위한 요점 설명을 위해 여기에 포함했다.

산림 벌채 가치사슬 문제 해결

산림 벌채로 인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로 하는 최근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현재의 토지 이용 관행이 초래하는 위협으로부터 숲, 이탄지,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관련해 수많은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제기된 사건들이 있고, 아마존 산림 벌채에 가담하는 제품을 판매한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제기된 역외 공급망 소송(*Envol Vert v. Casino*)도 있다.

산림 벌채없는 공급망을 요구하는 최근 사건들은 주로 농업 회사에 대한 자금 조달과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꼭지 잠그기' 사건으로는 브라질 NGO 단체 Comissão Pastoral da Terra와 프랑스 단체 Notre Affaire À Tous(위에서 언급됨)가 아마존 열대우림 산림 벌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BNP Paribas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 NGO Mighty Earth는 브라질의 거대 육류 기업 JBS가 발행한 허위 및 사기성 '녹색채권(green bonds)'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기후위성' 및 사기 고발장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했다. 이 고발에 따르면 JBS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기후 발자국의 97%를 차지하는 Scope3에 해당하는 공급망 배출이 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최근까지 공급망 추적 방식을 사용한 사건에서 식물성 제품보다 육류 기반 제품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는 육류 기반 제품은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진열대에 도달하기 전에 공급망 내 처리 단계가 적어 환경 피해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도 변하고 있다. 최근 ClientEarth는 미국 NCP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브라질의 거대 대두 기업인 Cargill이 구매, 거래하고 전 세계 시장에 출하하는 대두가 사람이나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제기된 *Humane Being v. United Kingdom* 사건은 농업 메탄 배출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영국의 공장식 축산 산업의 대두 사료 소비가 아마존 유역 산림 벌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후 주장을 내세운다(Setzer et al., 2022). 이 소송은 본안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모든 국내 구제책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송 당사자가 산림 벌채를 초래한 농업 또는 기타 활동을 승인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후 고려사항 통합'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래 동향

생물다양성-기후 연계와 탄소 흡수원의 중요성

산림 파괴 없는 공급망을 목표로 한 소송은 기업 행위자에게 운영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실사를 강화하고 원격 감지와 재무 데이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적 발전으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입법 중에는 산림 고위험 상품에 특별히 적용되는 요건도 있다. EU의 산림 벌채 규정(Deforestation Regulation)이 그 예다.

이러한 소송은 자회사의 별도 법인격을 무시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Van Dam, 2021). 기존의 역외 소송에서는 생물다양성 훼손 원인을 어떻게 정확히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는 소유 구조(*Vedanta v. Lungowe*; *Okpabi and Oguru v. Shell*; *Mariana*) 또는 공급망(*Envol Vert et al. v. Casino*; *ClientEarth v. Cargill*; *BIRD v. Jaguar Land Rover*)을 지적한다. 공급망을 통한 추적과 소유 구조를 통한 추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각각 매우 다른 법적 문제와 장애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과 기후 연계 관련해 탄소 흡수원도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지난 12개월 동안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국내 기후 법규에 따른 탄소 흡수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Kulovesi et al., 2023).

산림 벌채 관련 사건은 기후와 생물다양성 연계를 넘어 진전될 수 있다. 최근 페루 아마존 외곽에 살고 문명과 접촉하지 않은 마지막 원주민 부족이 이탈리아의 Jaguar사와 BMW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글로벌 기후, 생물 다양성, 인권 보호가 결합된 사례다. 이러한 소송은 자연과 그 자연에 생존을 의존하여 자연보호가 필수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며, '생물문화유산 소송(biocultural heritage litigation)'(Gilbert and Sena, 2018)이나 '전지구적 소송'(Kotzé, 2021)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양에 초점 맞추기

위에서는 육지 탄소 흡수원에 초점을 맞춘 소송을 언급했으나 세계 최대 탄소 흡수원인 해양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해양은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흡수하고(Friedlingstein et al., 2022),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생긴 과도한 열을 약 90%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SA, nd).

지금까지 해양과 관련된 기후소송은 두 가지 유형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Keuschnigg and Higham, 2022). 첫째, 소송 당사자들은 해양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보호를 근거로 기후 파괴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좋은 예로, 앞서 언급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ustaining the Wild Coast and Others v. Minister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and Others*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청구인은 석유 탐사 탄성파 조사가 해안 생태계, 해안 생태계와 지역사회 간 정서적, 경제적 관계,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과 생태계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강조해 왔다(*Asmania et al. v. Holcim* 참조).

앞으로는 쟁점이 바뀔 수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소송에서는 해양을 기후변화의 추가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중요한 탄소흡수원 기능을 보호할 정부와 기업의 의무에 대한 법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ITLOS의 권고적 의견 요청과 위에서 언급된 탄소 흡수원 관련 소송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다. 해양 산성화는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될 수 있는데, 해양산성화 완화 조치는 온실가스 전체나, CO₂외 온실가스보다는 특히 CO₂ 배출량 감소와 (Abate 외, 2022) pH 수준으로 측정되는 해양 산성도(Roland Holst, 2022)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해조류 양식이나 해양 알칼리성 향상과 같은 해양 기반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을 통해 해양의 탄소 제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된 사건도 등장할 수 있다(Silverman-Roati et al., 2021; Webb et al., 2021 참조). 이러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기술이 해양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의문이 남아 있다(Temple, 2022).

기상이변 - '기후' 소송을 넘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더 빈번하고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Holcim 사건과 '적응 실패'로 예측되는 Conservation Law Foundation v. Exxon Mobil 사건과 같이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는 소송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후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0년 2월 텍사스에 겨울 폭풍이 몰아친 뒤 제기된 Stephens Ranch v. Citi Energy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풍력 발전용 터빈을 운영하는 Stephens Ranch는 전력 공급 계약에 따라 Citigroup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Citigroup은 다른 곳에서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스티븐스 랜치는 '불가항력'을 근거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가 Stephens Ranch가 혹한기를 대비해 풍력 발전용 터빈을 준비하라는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초 결정을 내리자, Stephens Ranch는 합의했다(CCLI 및 CGI, 2022 참조). 마찬가지로, 2021년 겨울 폭풍 우리(Winter Storm Uri)가 지나간 후, 기후문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기후 관련 재난의 결과를 이해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Barnes, 2023).

단기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체계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외 '슈퍼 기후 오염물질(super climate pollutants)'의 빠른 감축과 탄소 흡수원 보호가 결합되어야 한다(IGSD, 2022). 슈퍼 기후 오염물질에는 장기 체류성 아산화질소와 단기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SLCPs) 네가지(메탄, 블랙 카본 검댕, 대류권 오존, 수소불화탄소)가 포함된다. 과학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법적

전략을 사용해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국제적으로 약 200개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해 서명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가장 성공적인 환경 조약으로 간주되며(Sabel and Victor, 2022), 오존층 파괴 물질 99%를 단계적으로 퇴출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서에서 금지하는 화학물질 중 상당수가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기후에도 도움이 되는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의정서는 2020년까지 약 0.5°C의 지구 온난화와 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북극 여름 해빙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England and Polvani, 2023). 이 선례는 향후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 부분을 살펴보면, 불법적인 수소불화탄소 거래에 연루된 단체에 대해 조사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블랙 카본 검댕이나 대류권 오존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메탄과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농장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기존의 불법행위법이나 인권법, 오염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 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기후에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정 환경법에도 근거할 수 있다.

국가 간 소송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제 법원과 재판소에 제기된 대부분의 기후소송은 인권 기구나 국제 투자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중재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다. 이러한 분쟁에는 국제법을 적용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공법 및 사법의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 분쟁은 아니다. 국제 및 지역 기구에 대한 3건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 계기가 되어 기후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소송이 국제 및 지역 기구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갈탄 광산 중 하나의 허가 연장을 둘러싸고 양국이 분쟁을 벌인 *Czech Republic v. Poland* 사례처럼, 진행 중인 화석 연료 생산과 사용을 둘러싼 중대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유럽법만 연관된 사건이었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은 더 광범위한 국제법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수 있다.

결론

지난 12개월 동안의 기후 소송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행위자와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전략적 소송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소송 분야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변호사와 판사들이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초국가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이 지난 사건들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유럽인권재판소가 KlimaSeniorinnen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2017년부터 미국 도시 및 주 소송들을 끌어온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후 의무 안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를 개입시키는 노력 또한 10년 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이 분야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논의된 다양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소송이든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전략 유형에서 명시된 모든 전략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송들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기후위성 소송은 특히 소송이 급증한 분야로 두드러진다. 기후위성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송을 상대적으로 쉽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특히 비국가 행위자의 기후 공약과 친환경 공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기후 행동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이는 공정 전환 소송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고, 국내 기후 법령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증가하는 것에 더불어, 앞으로는 '기후 해법'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소송이 법정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수많은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늦기는 했지만, 전 세계 기후 소송의 직접적인 결과가 전반적으로 기후 행동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소송의 전체적인 영향을 추적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소송이 여전히 글로벌 및 국내 기후 거버넌스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부록. 방법론 주석

데이터 수집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정 법이나 범죄에서 기후 변화 과학, 정책, 법률 문제가 주요 쟁점인 사건만 포함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계와 정책계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이러한 문제를 보다 핵심적이고 명시적인 주장으로 다루는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론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및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 사건이 삭제되는 동시에 더 많은 사건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CCLW 웹사이트의 방법론 섹션(Methodology)과 Sabin Center 기후 사건 차트의 정보>Abou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소송과 미국 소송이 아닌 사건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 유형에 따라 분석의 효용성도 제한적일 수 있다.

전체적 사건 분류

이 보고서는 주로 사건 요약본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류한다. 요약된 정보만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언론 보도, 혹은 둘 다에서 전체 사건 문서를 참조하기도 한다. 어떤 사건을 '전략적'이라고 분류하거나 기후변화 과학, 정책, 법률 문제가 특정 사건에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은 반드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건 평가는 종종 완벽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 특히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전략적', '준전략적', '비전략적'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더 우수하거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립적인 상황의 법적 구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 즉, 비전략적 소송이 사회에 광범위한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송 즉, 전략적 소송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사건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도를 폭넓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의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사건이 '전략적' 또는 '준전략적'으로 분류되면, 서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이 친기후적인지 반기후적인지 평가한다. 즉, 모든 사건의 '친기후성'을 분류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정 전환 사건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예외로 둔다. 어떤 경우에는 청구인이 보다 야심차게 공평한 기후 행동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 전환 사건과 친기후 사건 모두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 가지 예로, 멕시코 정부가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정부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Greenpeace v. Ministry of Energy and Others (에너지 부문 프로그램(Energy Sector Program) 2022에 관한) 사례가 있다.

전략의 분류

파트 1에서 언급했듯이, 저자는 전략적 기후 사건에서 활용된 전략을 이해하고 정량화하고자 했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건 검토는 주로 사건 요약본을 기반으로 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 문서 원본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참조했다. 어떤 경우는 전체 사건 전략이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전략을 사용했을 수 있다. 또한, 1차 및 2차 전략으로 검토 범위를 한정했으나 우선시되는 전략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의 문제이며, 저자의 평가가 기밀 정보 접근으로 인해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진 이의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마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략별로 소송을 분류하는 것이 기후 소송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의 분류

독자들은 저자가 직접적인 사법적 결과의 분류를 검토할 때 주어진 사건 내에서도 여러 단계로 결과를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건이 '진행 중'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특정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지위 또는 정당성과 같은 절차적 쟁점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간 결정은 분류하지 않지만, 제기된 쟁점이 새로운 성격을 띠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내려진 절차적 결정과 반대인 경우에는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항소가 제기되기 전에 1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 경우(항소가 있다면 해당 사건은 '진행 중'으로 분류), 세 번째는 항소 결과가 알려지는 경우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의 상태가 '유리한 사건' 또는 '불리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와 즉각적인 기후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류되었던 사건이 오히려 후속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법률 이슈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기각한 *Sacchi et al. v. Argentina* 사건은 기후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제법의 몇 가지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법적 사건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전반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친기후 소송이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되고 그 중 하나가 성공적이었을 경우, 이를 '긍정적인 결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영국 탄소중립 전략 사건은 청구인이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근거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분류했다.

분류에는 '중립적' 결과도 있다. 이는 특정 소송 결과가 기후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거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경우다. 예를 들어, *Greenpeace v. Mexico*(기후변화 대응 예산 삭감)의 경우, 그린피스는 멕시코 정부의 기후 대응 예산 삭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원고 적격과 관련한 문제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린피스에 유리하게 해결되었지만,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청구 대상이 된 예산 법안이 더 이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건의 주장과 증거의 요약은 바탕으로 결과를 평가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Private Forest Owners v. Thuringia*의 경우, 결과가 기후 행동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산림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이미 해충의 침입으로 인해 훼손되어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이 있는 지역에 풍력 발전소 건설을 막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튀링겐 산림법(*Thuringia Forest Act*)의 한 측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다. 어떤 경우는 '친기후'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가(특히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이 비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보고서의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소송은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기후 행동에 유리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인 사법 결과 분류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이 합의되거나 취하되는 많은 경우, 그 이유가 소송에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우려 사항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해결책 때문일 수 있다.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명확해지면, 해당 사건을 기후 행동을 개선함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Baden-Wuerttemberg 소비자보호협회가 친환경적 주장을 하는 DWS사의 특정 광고에 이의를 제기한 Verbraucherzentrale BadenWuerttemberg v. DWS*의 경우, DWS사가 해당 광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후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 사건 결과는 유리한 사건으로 분류했다.

References

- Abate R, Nadow NO and Dorrian-Bak H (2022) Litigation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Parallels and Synergies with Climate Litigation. *William & Mar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Review*. <https://ssrn.com/abstract=4256139>
- Ambrose J (2022) ExxonMobil launches legal challenge to EU's windfall tax on energy firms. *The Guardian*, June 12.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dec/28/exxonmobil-launches-legal-challenge-to-eus-windfall-tax-on-energy-firms>
- Anderson D and Sutherland D (2023) Big Oil Certiorari Denial May Alter Climate change Litigation, *Law360*, June 12. <https://www.zellelaw.com/news-publications-767>
- Aristova E, Higham C, Higham I, Setzer J (2023) *Conceptualising Corporate Climate Change Responsibilities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orkshop 'Corporate Human Rights Responsibility in OECD Case Law',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4-5 May 2023. Erlangen-Nürnberg, Germany.
- Auz J (2022) Human rights-based climate litigation: a Latin American cartography,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3(1):114-136.
- Averchenkova A, Fankhauser S and Nachmany M (2017) *Trends in Climate Change Legisl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https://doi.org/10.4337/9781786435781>
- Bakan J (2020) *The New Corporation: How Good Corporations are Bad for Democracy*, New York City: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 Barnes B (2023) Energy Litigation to Watch in 2023. *Kirkland & Ellis LLP*. <https://www.kirkland.com/news/in-the-news/2023/01/energy-litigation-to-watch-in-2023>
- Batros B and Khan T (2022) Thinking Strategically about Climate Litigation. In C Rodríguez-Garavito (Ed.), *Litigating the Climate Emergency: How Human Rights, Courts, and Legal Mobilization Can Bolster Climate Action*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pp. 97-1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9781009106214.006
- Benjamin L, Bhargava A, Franta B, Martínez Toral K, Setzer J, Tandon A (2022) *Climate-Washing Litigation: Legal Liability for Misleading Climate Communications*. Policy Briefing, The Climate Social Science Network. www.cssn.org/wp-content/uploads/2022/01/CSSN-Research-Report-2022-1-Climate-Washing-Litigation-Legal-Liability-for-Misleading-Climate-Communications.pdf
- BNP Paribas (2023) BNP Paribas details and strengthens its energy transition ambitions. Press release. <https://group.bnpparibas/en/press-release/bnp-paribas-details-and-strengthens-its-energy-transition-ambitions>
- Bodansky D, Rajamani L, and Werksman J (2021). Beyond COP26: Time for an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EJIL Talk!*, June 12 <https://www.ejiltalk.org/beyond-cop26-time-for-an-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
- Bouwer K (2015) *Climate-conscious lawyering*. Oxford University Press Blog, June 12. <https://blog.oup.com/2015/05/climate-consciousness-daily-legal-practice/>
- Bouwer K (2018) The Unsexy Future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JEL* 30(3), 483-506. <https://doi.org/10.1093/jel/eqy017>
- Bouwer K (2022) The Influences of Human Rights on Climate Litigation in Africa.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3(1):157-177. <https://doi.org/10.4337/jhre.2022.01.07>
- Bouwer K and Setzer J (2020) *Climate litigation as climate activism: what works?* The British Academy. <https://www.thebritishacademy.ac.uk/publications/knowledge-frontiers-cop26-briefings-climate-litigation-climate-activism-what-works/>
- Bouwer K and Setzer J (2020) *New trends in Climate Litigation: What works?* British Academy COP26 Briefings Series. www.thebritishacademy.ac.uk/documents/2701/Climate-Litigation-as-Climate-Activism-What-Works.pdf
- Bouwer K, Etemire U, Field T & Oluborode Jegede A (Eds) (forthcoming, 2024). *Climate Litigation and Justice in Africa*. Bristol University Press.

- Brulle R and Downie C (2022) Following the money: trade associations, political activity and climate change. *Climatic Change*, 175:11. <https://doi.org/10.1007/s10584-022-03466-0>
- Chan and Higham (2023) *Evolving regulation of companies in climate change framework laws*. GRI commentary, February 21.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news/evolving-regulation-of-companies-in-climate-change-framework-laws/>
- ClientEarth (2022) The EU must withdraw from the Energy Charter Treaty. Press release. <https://www.clientearth.org/latest/latest-updates/news/the-eu-must-withdraw-from-the-energy-charter-treaty/>
- Collins S (2023) Climate obligations and social norms.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22(2):103-125. <https://doi.org/10.1177/1470594X231156930>
- Commonwealth Climate and Law Initiative [CCLI] (n.d.). *Climate litigation: Briefing note for boards*. Commonwealth Climate and Law Initiative. <https://commonwealthclimatelaw.org/ccli-cgi-climate-litigation-brief/>
- Cummings SL (2017) Movement Lawyering,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1645. <https://ssrn.com/abstract=3067562>
- De Vilchez P and Savaresi A (2023)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nd Climate Litigation: A Game Changer?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2(1):3-19. <https://doi.org/10.1093/yiel/yvac064>
- Dehon E and Parekh R (2023) Net Zero Strategy 2.0: Into the Multiverse. Cornerstone Barristers. <https://cornerstonebarristers.com/net-zero-strategy-2-0-into-the-multiverse/>
- Dernback JC, Hester TD and Edwards AL (2023) *ABA encourages climate-conscious lawyering at COP27*,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s://www.americanbar.org/groups/environment_energy_resources/publications/trends/2022-2023/march-april-2023/aba-encourages-climate-conscious/
- Donald MS (2023) *Prudential Regulation and Climate Change*. *ex/Ante*, 2023(Special issue), 4-18. https://dx.doi.org/10.3256/978-3-03929-033-8_02
- Donger E (2022) Children and youth in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Advancing rights through legal argument and legal mobilizatio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https://doi.org/10.1017/S2047102522000218>
- Eilstrup-Sangiovanni M (2019) Competition and strategic differentiation among transnational advocacy groups. *Interest Groups and Advocacy* 8:376-406.
- England MR and Polvani LM (2023) The Montreal Protocol is delaying the occurrence of the first ice-free Arctic summe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20(22) <https://doi.org/10.1073/pnas.2211432120>
- Eskander SMSU and Fankhauser S (2023) The Impact of Climate Legislation on Trade-Related Carbon Emissions 1996-2018. *Environ Resource Econ*, 85:167-194. <https://doi.org/10.1007/s10640-023-00762-w>
- European Forum for Judges for the Environment [EUFJE] (2022). *EUFJE conference 24-25 October 2022 – Climate law and litigation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Germany*. London and Brussels: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nd the European Union Forum of Judges for the Environment. https://www.eufje.org/images/docConf/par2022/Questionnaire_2022_Germany.pdf
- European Lawyers Foundation and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ELF and CCBE] (2023) *Climate Chang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lawyers' practices*. 27 February 2023, Online webinar <https://elf-fae.eu/climate-change/>
- Fermeglia M, Higham C, Silverman-Roati K, Setzer J (forthcoming) Mapping Climate-Related Investment Arbitrations.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 Fitzmaurice M (2021) The leg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surrounding climate change litigation.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2(1):151-156 <https://doi.org/10.1093/yiel/yvac052>
- Friedlingstein P et al. (2022) Global Carbon Budget 2021, *Earth System Science Data* 14(4). <https://essd.copernicus.org/articles/14/1917/2022/>
- Ganguly G, Setzer J, and Heyvaert V (2018)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Suing Corporations for Climate Chang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8(4): 841-868. <https://doi.org/10.1093/ojls/gqy029>

- Garavito (2022) *Litigating the Climate Emergency: How Human Rights, Courts, and Legal Mobilisation Can Bolster Climat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009106214>
- Gerrard MB (2021) *Environmental rights in state constitutions*. Columbia Climate Change Blog, June 12. <https://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21/08/31/environmental-rights-in-state-constitutions/>
- Gerrard MB and McTiernan E (2018) Patterns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During Trump Era. *NYLJ* 259(45) https://scholarship.law.columbia.edu/faculty_scholarship/3060
- Ghaleigh N S (2010) "Six Honest Serving-Men": Climate Change Litigation as Legal Mobilization and the Utility of Typologies, *Climate Law* 31(1): 44. https://www.pure.ed.ac.uk/ws/portalfiles/portal/12454207/GHALEIGH_Six_Honest_Serving_Men.pdf
- Gibbs-Kneller D (2022) *No Real Prospect for Success: ClientEarth's Derivative Litigation Against the Directors of Shell*, Oxford Business Law Blog, April 8. <https://blogs.law.ox.ac.uk/business-law-blog/blog/2022/04/no-real-prospect-success-clientearths-derivative-litigation-against>
- Gilbert J and Sena K (2018) Litigating indigenous peoples' cultural rights: Comparative analysis of Kenya and Uganda. *African Studies*, 77(2):204-222. <https://doi.org/10.1080/00020184.2018.1452855>
- Golnaraghi M, Setzer J, Brook N, Lawrence W and Williams L (2021) *Climate Change Litigation – Insights into the evolving global landscape*. Geneva Association. https://www.genevaassociation.org/sites/default/files/research-topics-document-type/pdf_public/climate_litigation_04-07-2021.pdf
- Grasso M and Heede R (2023) Time to pay the piper: fossil fuel companies' reparations for climate damages. *One Earth*, June 12 [https://www.cell.com/one-earth/fulltext/S2590-3322\(23\)00198-7](https://www.cell.com/one-earth/fulltext/S2590-3322(23)00198-7)
- Heede R (2014) Tracing anthropogenic carbon dioxide and methane emissions to fossil fuel and cement producers, 1854–2010. *Climatic Change* 122:229–241. <https://doi.org/10.1007/s10584-013-0986->
- Heede R (2022) Carbon History of Holcim Ltd: Carbon dioxide emissions 1950–2021. *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https://callforclimatejustice.org/wp-content/uploads/Heede-Report.pdf>
- Heri C (2022) Climate Change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pturing Risk, Ill-Treatment and Vulnerabili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3(3):925-951 <https://doi.org/10.1093/ejil/chac047>
- Higham C, Averchenkova A, Setzer J and Koehl A (2021)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Climate Change Framework Laws*.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wp-content/uploads/2021/11/Accountability-mechanisms-in-climate-change-framework-laws.pdf>
- Higham C, Setzer J and Bradeen E (2022) *Challenging government responses to climate change through framework litigation*.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Hilson C J (2010) Climate Change Litigation: An Explanatory Approach (or Bringing Grievance Back In). *Climate change: La risposta del diritto*, Naples: Editoriale Scientifica: 421-436. <https://centaur.reading.ac.uk/16703/>
- Hodgson C (2023) The money behind the coming wave of climate litigation. *The Financial Times*, June 12 <https://www.ft.com/content/055ef9f4-5fb7-4746-bebd-7bfa00b20c82>
- Iyengar S (2023) Human rights and climate wrongs: Mapping the landscape of rights-based climate litigation. *RECIEL*. <https://doi.org/10.1111/reel.12498>
- Jegade AO (2018)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 A Reflection on Domestic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In E Daly and JR May (Eds.) *Implementing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 Current Global Challenges*, 84-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316691588.006>
- Kaminski I (2023) Climate litigation as investment. *The Wave*. <https://www.the-wave.net/climate-litigation-as-investment/>
- Kelleher O (2022) Systemic Climate Change Litigation, Standing Rules and the Aarhus Convention: A Purposive Approach.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34(1):107-134. <https://doi.org/10.1093/jel/eqab037>

- Keller H, Heri, C and Piskóty R (2022) Something ventured, nothing gained?—Remedies before the ECtHR and their potential for climate change cases. *Human Rights Law Review* 22(1). <https://doi.org/10.1093/hrlr/ngab030>
- Keuschnigg I and Higham C (2022) *How the law might be supporting a watershed moment for the oceans within the climate movement*. Commentary,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news/how-the-law-might-be-supporting-a-watershed-moment-for-the-oceans-within-the-climate-movement/>
- Knox H (2020) *Thinking Like a Climate: Governing a City in Times of Environmental Chang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215/9781478012405>
- Kotzé L (2021) Neubauer et al. versus Germany: Planetary Climate Litigation for the Anthropocene? *German Law Journal*, 22(8):1423-1444. <https://doi.org/10.1017/glj.2021.87>
- Kulovesi K, Savaresi A, Mähönen M and Bruun O (2023) Finland's first climate lawsuit: Watching the forest sink. *The Center for Climate Change,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June 12. <https://sites.uef.fi/cceel/finlands-first-climate-lawsuit-watching-the-forest-sink/>
- Kysar D (2022) It's time for climate change to reac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Hill*, June 12 <https://thehill.com/opinion/energy-environment/3774919-its-time-for-climate-change-to-reach-the-international-court-of-justice/>
- Loser N (forthcoming) Litigation against Coal-fired Power in South Africa: Lessons from and for global Climate Lit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Bouwer K, Etemire U, Field T & Oluborode Jegede A (Eds). *Climate Litigation and Justice in Africa*. Bristol: Bristol University Press.
- Macchi C and van Zeven J (2021)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Milieudéfense et al. v Royal Dutch Shell. *RECIEL*, 30(3):409-415. <https://doi.org/10.1111/reel.12416>
- Markell D and Ruhl JB (2012) An Empirical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n the courts: A new jurisprudence or business as usual? *Florida Law Review* 64(15). <https://scholarship.law.ufl.edu/flr/vol64/iss1/2>
- Maxwell L, Mead S, and van Berkel D (2022) Standards for adjudi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Urgenda-style climate cases.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3(1):35-63. <https://doi.org/10.4337/jhre.2022.01.02>
- Mayer B (2022) The Duty of Care of Fossil-Fuel Producer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Milieudéfense v. Royal Dutch Shell District Court of The Hague (The Netherlands).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doi:10.1017/S2047102522000103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transnational-environmental-law/article/duty-of-care-of-fossilfuel-producers-for-climate-change-mitigation/EDCC4BD586E989389D0CF721F1934F62>
- Moodley P (2022) The Tide of Climate Litigation Is upon Us in Africa. In C Rodríguez-Garavito (Ed.), *Litigating the Climate Emergency: How Human Rights, Courts, and Legal Mobilization Can Bolster Climate Action*, 376-38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lobalisation and Human Rights), <https://doi.org/10.1017/9781009106214>
- NASA (n.d.) Vital signs: ocean warming. Web page. <https://climate.nasa.gov/vital-signs/ocean-warming>
- News Wires (2023) Top French court orders government to adopt new climate measures, *France 24*, June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30510-top-french-court-orders-government-to-adopt-new-climate-measures>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1f92357-en>.
- Ohdedar B (2022) Climate adaptation, vulnerability and rights-based litigation: broadening the scope of climate litigation using political ecology,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3(1) :137-156.
- Okoth EMA and Odaga MO (2021) Leveraging Existing Approaches and Tools to Secure Climate Justice in Africa. *Carbon & Climate Law Review*, 15(2):129-138. <https://doi.org/10.21552/cclr/2021/2/4>
- Otto FEL, Minnerop P, Raju E, Harrington LJ, Stuart-Smith RF, Boyd E et al (2022) Causality and the fate of climate litigation: The role of the social superstructure narrative. *Global Policy*, 13:736-750.
- Partington R (2022) ExxonMobil launches legal challenge to EU's windfall tax on energy firms. *The Guardian*, June 13.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dec/28/exxonmobil-launches-legal-challenge-to-eus-windfall-tax-on-energy-firms>

- Partiti E (2022) Private Processes and Public Values: Disciplining Trade in Forest and Ecosystem Risk Commodities via Non-Financial Due Diligence.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11(1):141-172. <https://doi.org/10.1017/S2047102521000182>
- Peel J and Lin J (2019) Transnational Climate Litigation: The Contribution of the Global South.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3(4): 679-726. <https://doi.org/10.1017/ajil.2019.48>
- Peel J and Markey-Towler R (2021) Recipe for Success? Lessons for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from the Sharma, Neubauer, and Shell Cases. *German Law Journal*, 22(8):1484-1498. <https://doi.org/10.1017/glj.2021.83>
- Peel J and Osofsky HM (2015) *Climate change litigation: Regulatory pathways to cleaner ener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cbo9781139565851
- Peel J and Osofsky HM (2020) Climate Change litigation,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6(1):21-38. doi: 10.1146/annurev-lawsocsci-022420-122936.
- Peel J, Palmer A and Markey-Towler R (2022) *Review of Literature on Impacts of Climate Litigation: Report*. London and Melbourne: 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 and University of Melbourne. https://www.unimelb.edu.au/_data/assets/pdf_file/0008/4238450/Impact-lit-review-report_CIFF_Final_27052022.pdf
- Preston B (2021) Climate Conscious Lawyering, *Australian Law Journal* 95 ALJ 51.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949080
- Rodríguez-Garavito C (2020) Human Rights: The Global South's Route to Climate Litigation. *AJIL Unbound*, 114:40-44. <https://doi.org/10.1017/aju.2020.4>
- Rodríguez-Garavito C (2022) *Litigating the Climate Emergency: The Global Rise of Human Rights-Based Litigation for Climate Action*. In C. Rodríguez-Garavito (Ed.), *Litigating the Climate Emergency: How Human Rights, Courts, and Legal Mobilization Can Bolster Climate Action*, 9-8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https://doi.org/10.1017/9781009106214>
- Roland Holst RJ (2022) Taking the current when it serves: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an ITLOS advisory opinion on oceans and climate change. *RECIEL*, 1-9. <https://doi.org/10.1111/reel.12481>
- Sabel CF and Victor DG (2022) *Fixing the Climate: Strategies for an Uncertain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to M, Gostlow G, Higham C, Setzer J, Venmans F (2023) *Impacts of climate litigation on firm value*.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Working Paper 421/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Working Paper 397.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wp-content/uploads/2023/05/working-paper-397_-Sato-Gostlow-Higham-Setzer-Venmans.pdf
- Savaresi A and Setzer J (2022) Rights-base litiga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mapping the landscape and new knowledge frontiers.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3(1):7-34. <https://doi.org/10.4337/jhre.2022.01.01>
- Savaresi A, Kulolesi K and van Asselt H (2021) Beyond COP26: Time for an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EJIL Talk*, December 17. <https://www.ejiltalk.org/beyond-cop26-time-for-an-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
- Savaresi A, Setzer J, Armeni C, Bouwer K, Chan T et al. (under review) *Just Transition Litigation: A New Knowledge Frontier*.
- Setzer J and Benjamin L (2020a) Climate Litigation in the Global South: Constraints and Innovations.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9(1):77-101. <https://doi.org/10.1017/S2047102519000268>
- Setzer J and Benjamin L (2020b) Climate Litigation in the Global South: Filling in Gaps. *AJIL Unbound*, 114:56-60. <https://doi.org/10.1017/aju.2020.6>
- Setzer J and de Carvalho DW (2021) Climate litigation to protect the Brazilian Amazon: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right to a stable climate. *RECIEL*, 30(2):197-206. <https://doi.org/10.1111/reel.12409>
- Setzer J and Higham C (2022)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2 snapshot*.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publication/global-trends-in-climate-change-litigation-2022/>

- Setzer J, Narulla H, Higham C, and Bradeen E (2022). Climate Litigation in Europe: A summary report for the European Union Forum of Judges for the Environment.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wp-content/uploads/2022/12/Climate-litigation-in-Europe_A-summary-report-for-the-EU-Forum-of-Judges-for-the-Environment.pdf
- Setzer J, Silbert N and Vanhala L (forthcom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Edward Elgar Research Handbook on Climate Change Litigation*, edited by Sindico F, McKenzie K, Medici-Colombo G, Wegener L. Edward Elgar.
- Silbert N (2022). In search of impact: climate litigation impact through a human rights litigation framework,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3(1):265-289.
- Silverman-Roati K (2021) *US Climate Litigation in the Age of Trump: Full Term*.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https://climate.law.columbia.edu/sites/default/files/content/docs/Silverman-Roati%202021-06%20US%20Climate%20Litigation%20Trump%20Admin.pdf>
- Silverman-Roati K and Tigre MA (2022) *Municipalities of Puerto Rico v. Exxon: a unique class action against fossil fuel companies presses for climate accoun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Blog, Climate Law a Sabin Center blog,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https://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22/12/02/municipalities-of-puerto-rico-v-exxon-a-unique-class-action-against-fossil-fuel-companies-presses-for-climate-accountability-in-the-united-states/>
- Silverman-Roati K, Webb RM and Gerrard MB (2021) *Removing Carbon Dioxide Through Ocean Alkalinity Enhancement: Leg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Through Seaweed Cultivation.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https://climate.law.columbia.edu/sites/default/files/content/docs/Silverman-Roati%20et%20al_Removing%20CO2%20Through%20Seaweed%20Cultivation%20_2021-09.pdf
- Smith I and Bryan K (2023) Insurance industry turmoil over climate alliance exodus. *Financial Times*, June 13. <https://www.ft.com/content/1dd66ce1-a720-4c56-96d9-8d47f07f376f>
- Solana J, Setzer J and Wetzter T (2023) *Systemic lawyering*. Working paper, in file with the authors.
- Sulistiawati LY (2023) Climate Change Related Litigation in Indonesia: The Dawn of a New Beginning? *NUS Law Working Paper No. 2023/009*, *NUS Asia-Pacific Centre for Environment Law Work Paper 03*. <http://dx.doi.org/10.2139/ssrn.4366599>
- Supran G, Rahmstorf S and Oreskes N (2023) Assessing ExxonMobil's global warming projections. *Science*, 379(6628). DOI: 10.1126/science.abk0063
- Taylor M (2023) KLM Wins Court Case Against Flight Cap at Amsterdam's Schiphol Airport. *TravelPulse*, June 12. <https://www.travelpulse.com/News/Airlines-Airports/KLM-Wins-Court-Case-Against-Flight-Cap-at-Amsterdam-s-Schiphol-Airport>
- Temple J (2022) Running Tide seaweed company grapples with ecological concerns over its ambitious carbon removal plan.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2/06/16/1053758/running-tide-seaweed-kelp-scientist-departures-ecological-concerns-climate-carbon-removal/>
- Tigre MA and Carillo Bañuelos JA (2023) *The ICJ'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What Happens Now?*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https://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23/03/29/the-icjs-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what-happens-now/>
- Tigre MA and Setzer J (2023) *The Climate Fund Case: Relevance for Climate Litigation in Brazil and Beyond*. Working paper, in file with the authors.
- Tigre MA and Wewerinke-Singh (2023) *Loss and damage in climate litigation: from national, to transnational, to international*. Working paper in file with authors.
- Tigre MA, Urzola N and Goodman A (2023) Climate litigation in Latin America: is the region quietly leading a revolution?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4(1):67-93.
<https://doi.org/10.4337/jhre.2023.01.04>
- Tigre MA, Zenteno L, Hesselman M, Urzola N, Cisterna-Gaete P, and Luporini R [Tigre et al, 2023b] (2023) *Just Transition Litigation in Latin America: An initial categorization of climate litigation cases amid the*

- energy transition.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New York.
https://scholarship.law.columbia.edu/cgi/viewcontent.cgi?article=1198&context=sabin_climate_change
-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orthcoming)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 UNHRC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20)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good practice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Council.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HRC%2F43%2F53&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 Van Asselt H and Green F (2022) COP26 and the dynamics of anti-fossil fuel norms. *WIREs Climate Change*, 14(2) <https://doi.org/10.1002/wcc.816>
- Van Dam C (2021) Breakthrough in Parent Company Liability Three Shell Defeats, the End of an Era and New Paradigms.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 18(5):714-748
<https://doi.org/10.1515/ecfr-2021-0032>
- Vaughan S (2022) *Climate Change and the Rule of Law(yers)*. Blog, Centre for Law and Environment, UCL.
<https://www.ucl.ac.uk/law-environment/blog-climate-change-and-rule-law/climate-change-and-rule-lawyers>
- Viveros Uehara T and Auz J (2023) The Climate Emergency and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OpenGlobalRights*, June 12. <https://www.openglobalrights.org/climate-emergency-interamerican-court-human-rights/>
- Wang X and Lo K (2021) Just transition: A conceptual review.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82.
<https://doi.org/10.1016/j.erss.2021.102291>
- Webb RM, Silverman-Roati K, Gerrard MB (2021) *Removing Carbon Dioxide Through Ocean Alkalinity Enhancement: Leg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https://scholarship.law.columbia.edu/cgi/viewcontent.cgi?article=3743&context=faculty_scholarship
- Wentz J, Merner D, Franta B, Lehmen A, and Frumhoff PC (2023) Research priorities for climate litigation. *Earth's Future*, 11, e2022EF002928.
- White S and Bryan K (2023) BNP Paribas to stop funding new gas projects as litigation risk mounts. *Financial Times*, June 12. <https://www.ft.com/content/bba0a68c-7431-43db-9f38-43c5d947347f>
- Yan Z (2020) The Subordinate and Passive Position of Chinese Courts in Environmental Governance. In J Lin & D Kysar (Eds.),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the Asia Pacific*, 365-3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108777810.015>
- Zaelke D, Piccolotti R, Campbell K et al. (2022) *The Science Supporting the Need for Fast Near-Term Climate Mitigation*. Institute for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enter for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https://www.igsd.org/wp-content/uploads/2020/09/Science-Supporting-Need-for-Fast-Near-Term-Climate-Mitigation-Sept2020.pdf>
- Zhu M (2022) The Rule of Climate Policy: How Do Chinese Judges Contribute to Climate Governance without Climate Law?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11(1):119-139.
<https://doi.org/10.1017/S2047102521000212>